

정책연구 2008-14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전략

Locati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Promotion of the Future  
Promising Industry in Gyeonggi-Do

2008. 9

연구책임: 김 군 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신 민 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 연구 요약

---

---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전략

Locati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Promotion of the  
Future Promising Industry in Gyeonggi-Do

김 군 수

---

---

【키워드】 미래유망산업, 전략산업육성지구, 입지개발전략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속에서 신산업(예 : 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령친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출현/성장하고 차세대 주력기간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업종)과 유망서비스산업(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신산업, 차세대 주력기간산업, 유망서비스산업 등이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미래 전략산업(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안양과 군포 등에서 공업지역재정비나 대기업이전적지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의 수요가 강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복합용도(주거-산업 공존)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자족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입지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 리조트개발계획 등이 수립되고 단지중심의 클러스터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핵심앵커시설에 대한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지정책과 다른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안양과 군포 등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한 신산업의 유치, 의료서비스산업 및

관광물류산업 등의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촉진,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제도 등의 미흡으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등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지지원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으로 제2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전망한다. 또한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의 전망을 살펴본다. 제3장은 앞서 살펴본 미래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의 공업지역 및 산업정책의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를 선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며, 서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 핵심시설 및 기업유치전략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 행재정지원방안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단으로 전략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는 핵심시설 및 기업을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

## ■ 결론 및 정책건의

### ○ 새로운 경기도 주도의 산업입지정책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

경기도는 서해안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도 3대 신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들 단지 및 지구에 관련 기업들이나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핵심앵커시설이나 핵심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

존의 산업입지정책이나 도시개발지원정책, 관광지조성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대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 활용,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연계·조정 강화 및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인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및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첫째 경기도에는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지원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기업육성 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상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법에 근거하여 가칭)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개정 시 담아야 할 내용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정의,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절차(상향식과 하향식),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기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정의와 수립방법 및 절차, 전략산업육성지구에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정책 등이다.

둘째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은 전략산업육성지구내 부지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매입, 핵심시설 공동유치활동, 도로·상하수도·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우선융자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 - 목 차 -

<b>제1장 서론</b>	<b>3</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기대효과	4
<b>제2장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b>	<b>7</b>
<b>제1절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b>	<b>7</b>
1.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7
2. 산업구조 고도화 변화추이	8
<b>제2절 경기도 산업구조고도화 전망</b>	<b>14</b>
1.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	14
2. 지식기반/주력기간제조업 구조 전망	15
3. 지식기반서비스업 구조 전망	20
<b>제3절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분석</b>	<b>22</b>
1. 국내외 트렌드변화에 따른 산업의 대응과제	22
2.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관련 기존연구 검토	24
3.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전망	27

**제3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방향과 타당성 검토 — 33**

**제1절 새로운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 33**

- 1. 미래유망산업의 전략적인 유치 — 33
- 2. 대도시내 노후공업지역 및 대기업이전적지의 최적 활용 — 35
- 3.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정책과의 연계/조정 강화 — 36
- 4. 경기도 주도의 새로운 입지정책 수립 필요 — 36

**제2절 새로운 산업입지정책 방향 — 37**

- 1. 새로운 입지정책방향 - 전략산업육성지구 — 37
- 2. 상위법에 의한 제도적 배경 — 41

**제3절 기존 공업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 — 44**

- 1.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 44
- 2. 안양시 공업지역 — 46
- 3. 서울시 준공업지역 — 51
- 4. 인천시 공업지역 — 52

**제4절 기존 산업입지정책의 활용성 검토 — 53**

- 1. 산업입지정책 — 53
- 2. 산업입지정책수단의 유형 — 54
- 3. 기존 유형별 산업입지정책의 활용가능성 — 56

**제4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전략 — 63**

**제1절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의 선정방법 — 63**

1. 선정필요성	63
2.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 후보지 분석	63
3. 전략산업육성지구 선정방법	67
<b>제2절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의 제도적 지원방안</b>	<b>69</b>
1. 상위법과 전략산업육성지구와의 관계	69
2.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70
3.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70
<b>제3절 서울시 사례분석: 산업개발진흥지구</b>	<b>71</b>
<b>제4절 전략산업육성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b>	<b>73</b>
1. R&D형 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73
2. 관광·물류형 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77
3. 창조산업형 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79
<b>제5장 정책건의</b>	<b>85</b>
1. 새로운 경기도 주도의 산업입지정책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 필요성	85
2.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 후보지 분석	87
3. 전략산업육성지구 선정방법	90
4. 상위법과 전략산업육성지구와의 관계	91
5.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92
6.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93
<b>참 고 문 헌</b>	<b>97</b>

## - 표 목 차 -

〈표 1〉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GRDP기준, 백만원, %) —————	7
〈표 2〉 경기도 제조업내 주력기간과 지식기반제조업 구조의 변화 추이(부가가치 기준, %) ———	8
〈표 3〉 전국 대비 경기도 주력기간과 지식기반제조업 구조의 변화 추이(부가가치, %) —————	8
〈표 4〉 경기도 제조업내 지식기반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부가가치, %) —————	9
〈표 5〉 전국 대비 경기도 지식기반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GRDP, %) —————	10
〈표 6〉 경기도내 주력기간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부가가치, %) —————	10
〈표 7〉 전국 대비 경기도 주력기간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GRDP, %) —————	11
〈표 8〉 지식기반/주력기간 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종사자수, %) —————	12
〈표 9〉 지식기반서비스업 GRDP 비중변화 추이(%) —————	13
〈표 10〉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구조변화 추이(%) —————	14
〈표 11〉 경기도의 지식기반 제조업 전망 —————	17
〈표 12〉 경기도의 주력기간 제조업 전망 —————	19
〈표 13〉 경기도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전망 —————	21
〈표 14〉 2020 한국의 유망산업 선정- 14개 분야 41개 산업/제품 —————	25
〈표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경기도 전략산업- 7개 산업 —————	26
〈표 16〉 삼성경제연구소의 선정한 미래유망산업 —————	27
〈표 17〉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가능 검토 —————	38
〈표 18〉 관광·물류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가능 —————	39
〈표 19〉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가능 —————	40
〈표 20〉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유형별 도입 시설 —————	41
〈표 21〉 산업입지정책수단별 지원수단 비교 —————	55
〈표 22〉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입지 가능 지역 —————	65
〈표 23〉 산업개발진흥지구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 상황 —————	72
〈표 24〉 서울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원 사항 개요 —————	73
〈표 25〉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창조계층 인력 분포 —————	80
〈표 26〉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입지 가능 지역 —————	88

## - 그림 목 차 -

〈그림 1〉 경기도 산업별 생산총액 변화추이	7
〈그림 2〉 경기도 산업 비중변화 추이	7
〈그림 3〉 경기도의 산업 대분류 전망	15
〈그림 4〉 경기도의 제조업 전망	16
〈그림 5〉 산업연구원의 유망산업 도출 방법	24
〈그림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전략산업 도출 프로세스	25
〈그림 7〉 삼성경제연구원의 유망산업 도출 방법	26
〈그림 8〉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유형별 주요 시설	40



# 제1장 서론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속에서 신산업(예 : 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령친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출현/성장하고 차세대 주력기간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업종)과 유망서비스산업 (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경기도도 이들 관련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신산업, 차세대 주력기간산업, 유망서비스산업 등이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경기도는 미래 전략산업(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재 안양과 군포 등에서 공업지역재정비나 대기업이전적지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의 수요가 강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복합용도(주거-산업 공존)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즉 자족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입지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 리조트개발계획 등이 수립되고 단지중심의 클러스터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핵심앵커시설에 대한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지정책과 다른 개념의 정책이 필요함.
- 즉 경기도는 안양과 군포 등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한 신산업의 유치, 의료서비스산업 및 관광물류산업 등의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촉진,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관련제도 등의 미흡으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등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재의 입지지원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와 해당 시군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6년~목표년도 2020년
- 과업의 주요내용
  - 산업입지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미래신산업유치를 위한 입지지원정책 분석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정의 및 전망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방향, 타당성검토
  - 입지지원을 위한 지구지정방안, 인센티브 방안
  - 법제도개선방안(경기도 조례제정 등)

## 3. 기대효과

-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공업지역이나 신규개발지역에서 유망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단지조성정책이나 아파트형공장 지원정책, 벤처집적시설입지지원 정책 등은 유망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한계점을 지님. 따라서 기존의 정책과 연계시킨 새로운 개념의 입지지원정책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을 유치/육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 제2장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

---

제1절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

제2절 경기도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절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분석



## 제2장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

### 제1절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

#### 1.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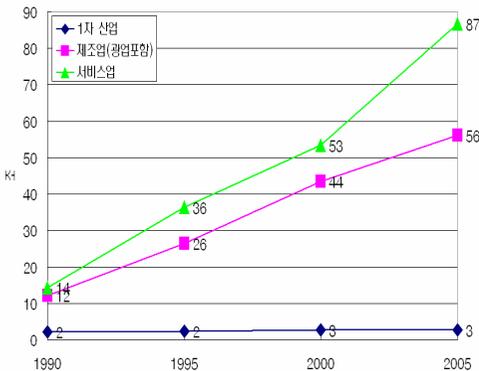
##### □ 경기도 산업구조

- GRDP를 기준으로 한 경기도 산업구조는 1990년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비중이 각각 7.3%, 42.5%, 50.2%에서 2005년에 그 비중이 1.8%, 38.6%, 59.5%로 변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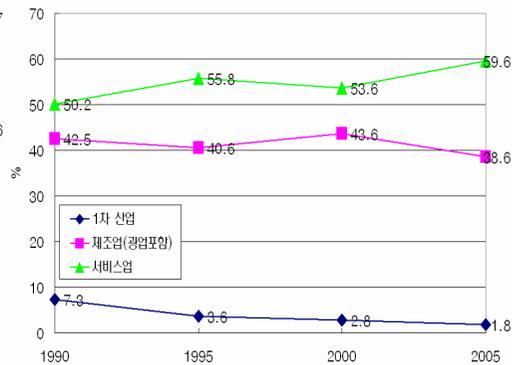
〈표 1〉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GRDP기준, 백만원, %)

구분	1990	1995	2000	2005
1차 산업	2,093,410 (7.3)	2,372,088 (3.6)	2,803,659 (2.8)	2,687,561 (1.8)
제조업(광업포함)	12,094,998 (42.5)	26,443,057 (40.6)	43,545,760 (43.6)	56,132,099 (38.6)
서비스업	14,297,759 (50.2)	36,387,202 (55.8)	53,462,001 (53.6)	86,765,813 (59.6)

자료 : 통계청, 2007



〈그림 1〉 경기도 산업별 생산총액 변화추이



〈그림 2〉 경기도 산업 비중변화 추이

## 2. 산업구조 고도화 변화추이

### □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의 구조변화

- 2005년 현재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제조업 대비**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20.77%대 46.28%로 2000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함. 고용자수 기준으로는 2005년 현재 전국 대비 경기도내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25.34%대 26.95%로 2000년에 비해 주력기간제조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음.
- 2005년 현재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경기도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17.32%대 47.20%로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함께 다소 증가하였음. 고용자수 기준으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내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 비중이 19.53%대 36.04%로 2000년에 비해 모두 다소 감소하였음.

〈표 2〉 경기도 제조업내 주력기간과 지식기반제조업 구조의 변화 추이(부가가치 기준, %)

구분	부가가치기준		고용자수기준	
	2000	2005	2000	2005
주력기간제조업	20.07	20.77	27.16	25.34
지식기반제조업	46.49	46.28	25.21	26.95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표 3〉 전국 대비 경기도 주력기간과 지식기반제조업 구조의 변화 추이(부가가, %)

구분	부가가치기준		고용자수기준	
	2000	2005	2000	2005
주력기간제조업	15.98	17.32	23.55	19.53
지식기반제조업	46.67	47.20	47.50	36.04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 □ 지식기반제조업과 주력기간제조업의 세부업종별 변화

-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 경기도내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전자정보기기와 반도체로서 2005년 현재 경기도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이 각각 14.55%와 18.75%인데 2000년에 비해 전자정보기기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음. 메카트로닉스와 생물산업은 경기도내 비중이 작지만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였음.
-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 전국 대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2005년 현재 반도체 81.53%, 생물산업 66.66%, 메카트로닉스 45.83%, 환경산업 36.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 경기도 제조업내 지식기반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부가가치, %)

구분	지식기반 제조업	
	2000	2005
전자정보기기	17.24	14.55
반도체	18.10	18.75
메카트로닉스	2.19	3.75
정밀화학	3.28	2.57
생물산업	3.74	4.21
정밀기기	0.89	1.02
신소재	0.37	0.72
환경	0.68	0.70
항공, 우주	0.00	0.00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표 5〉 전국 대비 경기도 지식기반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GRDP, %)

구분	지식기반 제조업	
	2000	2005
전자정보기기	41.40	31.46
반도체	70.71	81.53
메카트로닉스	34.31	45.83
정밀화학	33.00	33.57
생물산업	69.29	66.66
정밀기기	30.91	34.23
신소재	12.81	16.89
환경	33.56	36.36
항공, 우주	0.40	0.36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 주력기간제조업 중에서 경기도내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와 기계 및 섬유로서 2005년 현재 경기도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이 각각 9.91%, 4.25%, 2.52%인데 2000년에 비해 자동차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섬유 비중은 감소하였음.
-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주력기간제조업 중에서 전국 대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2005년 현재 자동차 27.74%, 신발 29.60%, 섬유 22.85%, 기계 2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자동차와 신발, 섬유산업은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기계산업은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

〈표 6〉 경기도내 주력기간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부가가치, %)

구분	주력기간 제조업	
	2000	2005
섬유	4.13	2.52
의류	0.74	0.51
신발	0.31	0.28
석유화학	0.28	0.29
철강	0.45	1.36
기계	4.25	4.25
가전	2.19	1.63
자동차	7.71	9.91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표 7〉 전국 대비 경기도 주력기간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GRDP, %)

구분	주력기간 제조업	
	2000	2005
섬유	20.80	22.85
의류	8.41	7.30
신발	21.93	29.60
석유화학	2.59	2.34
철강	2.76	7.23
기계	23.85	22.42
가전	23.72	16.97
자동차	25.17	27.74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 종사자수 기준으로 할 경우,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 경기도 전체제조업 대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전자정보기기와 반도체, 메카트로닉스업종인데, 반도체와 메카트로닉스업종은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그 비중이 증가추세임. 한편 지식기반제조업은 전국 대비 비중은 거의 전부 높으나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거의 전 업종에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종사자수 기준으로 주력기간제조업 중에서 전체제조업 대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2005년 현재 자동차, 기계, 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자동차산업은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기계, 섬유산업은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 또한 주력기간제조업 중에서 전국 대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2005년 현재 가전, 기계, 섬유, 자동차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가전산업은 2000년에 비해 전국 대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 기계, 섬유, 자동차 산업은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8〉 지식기반/주력기간 제조업 세부 구조변화 추이(증사자수, %)

구분		경기도 제조업내 비중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	
		2000	2005	2000	2005
지식기반 제조업	전자정보기기	10.96	10.62	52.64	33.66
	반도체	4.06	5.67	63.08	51.24
	메카트로닉스	3.04	3.89	45.65	39.82
	정밀화학	2.33	2.18	40.67	31.78
	생물산업	1.88	1.65	44.13	36.84
	정밀기기	1.51	1.53	41.68	32.06
	신소재	0.41	0.46	17.48	17.90
	환경	1.01	0.94	41.28	31.99
	항공, 우주	0.01	0.01	1.12	1.65
주력기간 제조업	섬유	6.86	5.08	26.66	23.00
	의류	2.16	1.39	12.16	8.32
	신발	0.51	0.36	14.14	14.07
	석유화학	0.47	0.41	12.73	10.00
	철강	0.48	0.50	8.69	7.04
	기계	7.22	6.91	34.46	26.04
	가전	3.47	4.31	37.26	39.65
	자동차	5.98	6.37	29.48	22.27
	조선	0.01	0.01	0.17	0.11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구조변화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5년 현재 GRDP기준으로는 경기도 전체서비스산업 대비 21.58%, 전국 지식기반서비스업 대비 1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사자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전체서비스산업 대비 18.42%, 전국 지식기반서비스업 대비 20.42%를 차지하고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2000년에 비해 경기도 서비스업 내에서도, 전국 해당산업대비로도 증가추세임.
-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 경기도 전체서비스산업 대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 물류산업, 정보처리산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산업, 연구개발산업, 관광산업이나, 특히 고용자수 기준으로는 물류산업과 관광산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00년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어 일자리 창출면에서 이 3개 서비스산업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에서 고용자수 기준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연구개발산업, 관광산업, 물류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관광산업과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됨.

〈표 9〉 지식기반서비스업 GRDP 비중변화 추이(%)

구분	경기도내 서비스산업대비 비중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	
	2000	2005	2000	2005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체	20.86	21.58	13.80	15.93
연구개발산업	2.35	2.40	43.53	33.55
컨설팅및엔지니어링산업	2.22	2.41	12.55	14.24
마케팅산업	0.02	0.01	2.62	1.73
디자인산업	0.03	0.05	5.23	8.07
인적자원서비스산업	0.35	0.55	10.62	13.08
영화산업	1.12	0.51	23.90	15.00
방송산업	0.27	0.60	3.88	8.47
문화산업	0.05	0.13	8.12	17.13
정보통신	6.07	5.87	19.47	22.70
정보처리산업	0.84	2.41	3.94	12.89
관광산업	1.58	0.91	29.71	25.27
물류산업	5.96	5.73	11.17	12.28

자료 : 통계청,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7.  
 주 : 전산업=100(단위:%)

〈표 10〉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구조변화 추이(%)

구분	경기도내 서비스산업 대비 비중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	
	2000	2005	2000	2005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체	16.49	18.42	17.72	20.42
연구개발산업	1.02	1.47	37.70	45.16
컨설팅및엔지니어링산업	2.43	2.66	17.98	19.54
마케팅산업	0.10	0.08	7.59	6.09
디자인산업	0.04	0.05	10.09	10.69
인적자원서비스산업	1.00	1.49	18.27	16.77
영화산업	0.16	0.17	13.63	16.32
방송산업	0.12	0.11	8.91	10.05
문화산업	0.08	0.12	14.33	19.98
정보통신	1.43	1.14	19.59	19.56
정보처리산업	0.34	0.81	5.13	12.07
관광산업	2.23	2.36	19.72	22.13
물류산업	7.54	7.98	18.22	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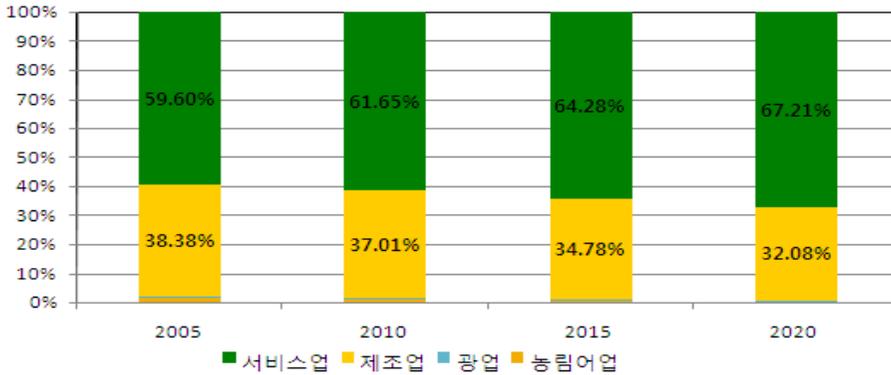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7.

## 제2절 경기도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 1.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

- 경기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하는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구조도 2005년에 제조업 38.38%, 서비스업

59.60%에서 2020년에는 제조업 32.08%로 다소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67.21%로 확대될 전망



〈그림 3〉 경기도의 산업 대분류 전망

	2005	2010	2015	2020
농림어업	1.85%	1.21%	0.85%	0.63%
광업	0.17%	0.12%	0.09%	0.08%
제조업	38.38%	37.01%	34.78%	32.08%
서비스업	59.60%	61.65%	64.28%	67.21%

주 : 지역 내 총부가가치 해당연도가격 기준(전산업=100)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기수도가스업을 포함한 3차산업 범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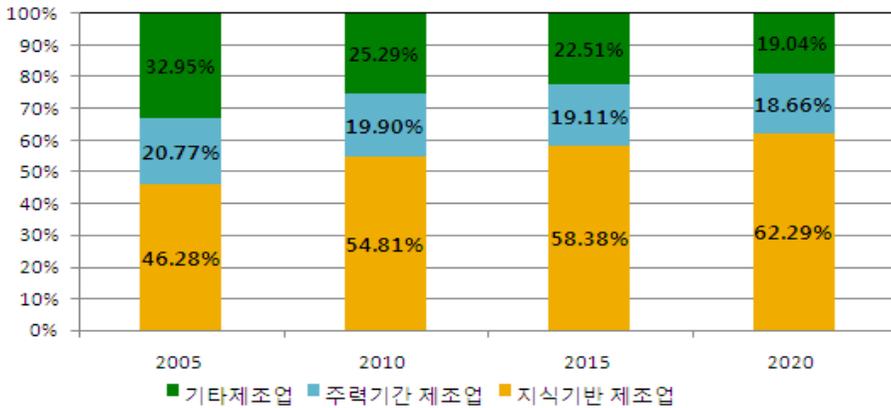
## 2. 지식기반/주력기간제조업 구조 전망

### □ 경기도 제조업 구조 전망

- 경기도의 제조업은 향후 지식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주력기간 제조업의 비중도 일정수준을 유지할 전망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진전하면서 제조업에서는 지식의 창출, 확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지식기반 제조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

기도의 지식기반 제조업은 2005년에 46.28%에 62.29%로 확대될 전망

- 주력기간 제조업도 업종내의 지식집약화에 의한 지속적인 생산성향상으로 2005년에 20.77%에서 2020년에 18.66%로 다소 축소되지만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전망



〈그림 4〉 경기도의 제조업 전망

	2005	2010	2015	2020
지식기반 제조업	46.28%	54.81%	58.38%	62.29%
주력기간 제조업	20.77%	19.90%	19.11%	18.66%
기타제조업	32.95%	25.29%	22.51%	19.04%

주 : 지역 내 총부가가치 해당연도가격 기준(제조업=100)

### □ 경기도 지식기반 제조업 구조 전망

- 반도체, 전자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식기반 제조업은 2005년에 제조업내 비중이 46.28%에서 2020년에는 62.29%로 확대될 전망
  - 반도체, 전자정보산업 등은 기존에 형성된 집적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완결성을 제고하면 더욱 가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메카트로닉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집적지에 제공하는 장비생산 업체의 육성

등으로 그 비중이 확대될 전망

- 정밀화학은 기존 업체들의 발전은 다소 미약하겠지만,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소폭적인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식품산업 위주의 생물산업은 향후 바이오 신약, 의약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투자 확대에 인하여 산업전반의 구조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표 11〉 경기도의 지식기반 제조업 전망

	2005	2010	2015	2020
〈경기도내 비중, 제조업=100〉				
전자정보기기	14.55%	17.43%	19.02%	21.20%
반도체	18.75%	23.65%	24.75%	25.83%
메카트로닉스	3.75%	3.95%	4.27%	4.41%
정밀화학	2.57%	2.65%	2.77%	2.98%
생물산업	4.21%	4.43%	4.55%	4.66%
정밀기기	1.02%	1.14%	1.27%	1.32%
신소재	0.72%	0.77%	0.86%	0.95%
환경	0.70%	0.78%	0.89%	0.94%
항공, 우주	0.00%	0.00%	0.00%	0.00%
지식기반 제조업 계	46.28%	54.81%	58.38%	62.29%
〈전국 대비 비중, 전국 해당산업=100〉				
전자정보기기	29.52%	24.47%	25.62%	27.63%
반도체	76.51%	77.00%	77.70%	78.44%
메카트로닉스	43.01%	42.16%	43.65%	42.44%
정밀화학	31.50%	38.71%	39.77%	42.54%
생물산업	62.56%	76.84%	74.54%	70.35%
정밀기기	32.12%	42.20%	49.13%	50.39%
신소재	15.85%	21.43%	25.37%	29.57%
환경	34.12%	55.87%	65.20%	69.74%
항공, 우주	0.34%	0.33%	0.35%	0.34%
지식기반 제조업 평균	42.84%	41.31%	42.40%	43.79%

### □ 경기도 주력기간 제조업 구조 전망

- 경기도의 주력기간 제조업은 전국 대비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나, 자동차부품, 기계 부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현재 경기도의 주력기간 제조업은 전국 대비 15.76%이며, 향후 2020년까지 16.76%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장부품 및 소재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기계산업은 기존 기계업체의 신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지식집약화 등으로 그 비중이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섬유 등 경공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섬유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됨.

〈표 12〉 경기도의 주력기간 제조업 전망

	2005	2010	2015	2020
〈경기도내 비중, 제조업=100〉				
섬유	2.52%	2.30%	2.02%	1.80%
의류	0.51%	0.32%	0.21%	0.14%
신발	0.28%	0.16%	0.11%	0.08%
석유화학	0.29%	0.10%	0.06%	0.03%
철강	1.36%	1.15%	0.92%	0.80%
기계	4.25%	4.44%	4.50%	4.56%
가전	1.63%	1.13%	0.80%	0.51%
자동차	9.91%	10.29%	10.48%	10.72%
조선	0.01%	0.01%	0.02%	0.02%
주력기간제조업 계	20.77%	19.90%	19.11%	18.66%
〈전국 대비 비중, 전국 해당산업=100〉				
섬유	21.44%	20.91%	20.52%	20.10%
의류	6.85%	5.49%	4.65%	3.61%
신발	27.78%	23.89%	22.75%	19.85%
석유화학	2.20%	1.24%	0.74%	0.40%
철강	6.78%	11.16%	9.75%	8.60%
기계	22.45%	22.59%	22.74%	22.88%
가전	15.93%	10.03%	6.68%	4.07%
자동차	26.04%	26.58%	27.06%	27.55%
조선	0.12%	0.14%	0.16%	0.17%
주력기간제조업 평균	15.76%	17.17%	16.98%	16.76%

### 3. 지식기반서비스업 구조 전망

- 경기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여건조성이 완료되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2005년 현재 경기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전국 대비 15.93%이며, 경기도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58%의 낮은 수준에 있으나, 향후 2020년까지 이들 비중은 각각 24.75%와 27.9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연구개발산업과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산업은 경기도의 산업육성 의지와 더불어 기존 제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요확대, 대중국 사업기회 및 제조업의 외부화 등으로 그 비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표 13〉 경기도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전망

	2005	2010	2015	2020
〈경기도내 비중, 서비스업(건설전기수도가스제외)=100〉				
연구개발산업	2.40%	2.46%	2.57%	2.67%
컨설팅및엔지니어링산업	2.41%	2.98%	3.51%	4.02%
마케팅산업	0.01%	0.01%	0.02%	0.02%
디자인산업	0.05%	0.05%	0.05%	0.05%
인적자원서비스산업	0.55%	0.65%	0.73%	0.81%
영화산업	0.51%	0.54%	0.60%	0.64%
방송산업	0.60%	0.73%	0.75%	0.77%
문화산업	0.13%	0.14%	0.14%	0.14%
정보통신	5.87%	6.27%	6.64%	7.20%
정보처리산업	2.41%	2.67%	2.77%	2.81%
관광산업	0.91%	1.28%	1.38%	1.73%
물류산업	5.73%	6.02%	6.54%	7.04%
지식기반서비스업 계	21.58%	23.80%	25.70%	27.90%
〈전국 대비 비중, 전국 해당산업=100〉				
연구개발산업	33.55%	35.10%	36.26%	37.21%
컨설팅및엔지니어링산업	14.24%	18.14%	22.12%	27.47%
마케팅산업	1.73%	2.50%	3.78%	4.14%
디자인산업	8.07%	9.21%	9.76%	9.96%
인적자원서비스산업	13.08%	16.11%	18.58%	22.31%
영화산업	15.00%	17.17%	19.66%	21.39%
방송산업	8.47%	10.45%	11.58%	12.47%
문화산업	17.13%	18.98%	20.67%	21.11%
정보통신	22.70%	19.16%	20.48%	22.58%
정보처리산업	12.89%	14.74%	15.84%	17.39%
관광산업	25.27%	25.95%	26.45%	26.79%
물류산업	12.28%	18.64%	24.40%	32.01%
지식기반서비스업 평균	15.93%	18.67%	21.40%	24.75%

- 물류산업은 경제자유지역의 지정에 따른 평택항의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 확대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
- 관광산업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유치 및 서해안 관광개발 등으로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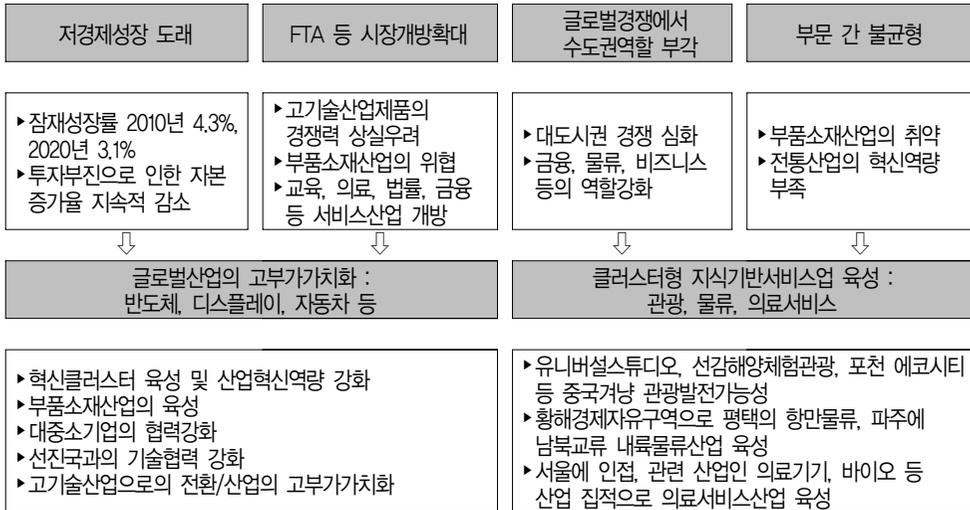
### 제3절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분석

#### 1. 국내외 트렌드변화에 따른 산업의 대응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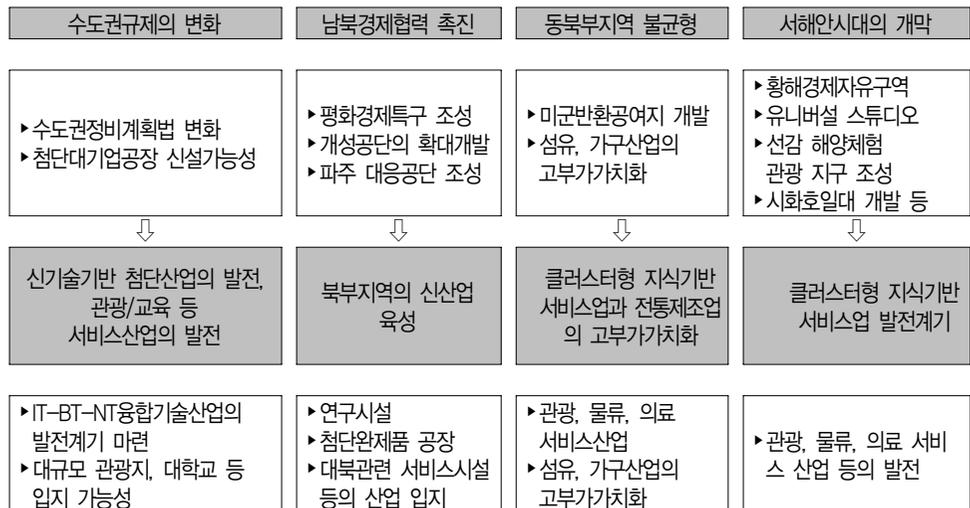
##### □ 미래의 글로벌 트렌드변화와 산업의 기회/대응과제

세계경제의 통합가속화와 역학구조 변화	신기술 융합 가속화 및 산업간 융합화	환경과 자원문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확산과 다자주의 진전</li> <li>▶ BRICs 국가의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15년 이내에 융합기술 시대 도래</li> <li>▶ 신소재 혁명의 대두</li> <li>▶ 신제품·서비스 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중요성 증대</li> <li>▶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정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li> <li>▶ 생산인력의 확보 문제</li> </ul>
↓	↓	↓	↓
산업구조 변화	신기술산업 등장 1 : IT기반융합산업	신기술산업 등장 2 : 신재생에너지산업	신기술산업 등장 3 : 고령친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술산업으로 전환</li> <li>▶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li> <li>▶ 서비스산업의 대형화와 복합화</li> <li>▶ BRICs 국가와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의 산업혁명 주도</li> <li>▶ 경기도는 IT와 BT 산업 집적으로 우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에 반도체, 자동차, 전지, 환경 산업 집적도 높아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산업의 발전 가능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2023년 고령 사회(14%) 진입</li> <li>▶ 서울에 인접, 관련 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등 산업 집적</li> </ul>

### □ 미래의 대내적 트렌드변화와 산업의 대응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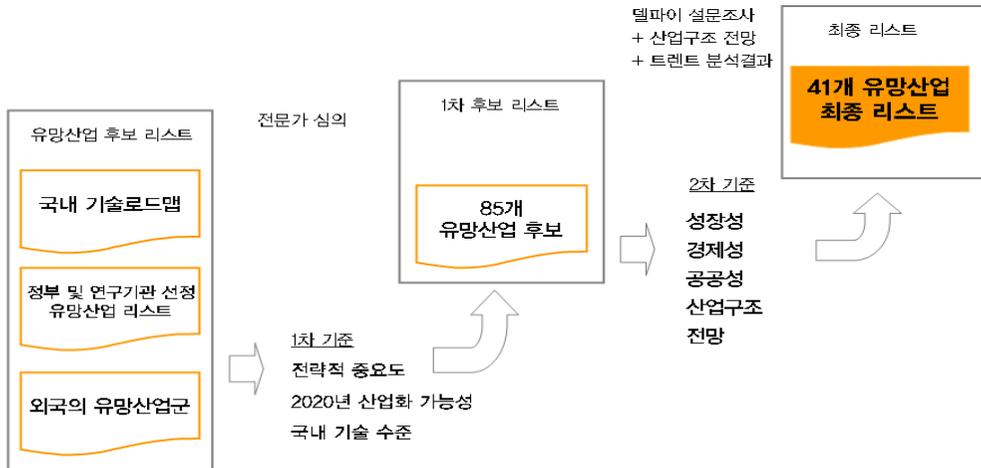


### □ 수도권 경제 트렌드변화와 산업의 기회/대응과제



## 2.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관련 기존연구 검토

### □ 산업연구원의 유망산업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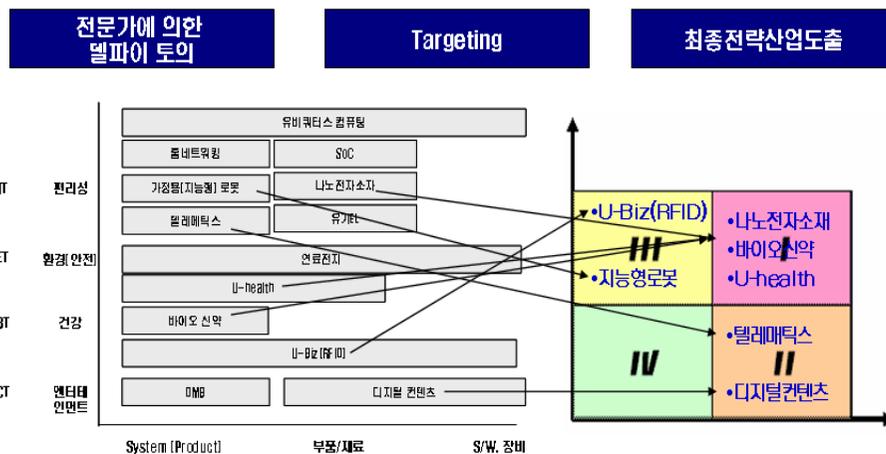
〈그림 5〉 산업연구원의 유망산업 도출 방법

- 산업연구원에서 도출한 2020년 한국유망산업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분야 41개 산업/제품임. 이 중에서 경기도에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자동차, 의료서비스, 차세대에너지, 로봇, 첨단화학소재 등은 경기도에서도 향후 유망산업군이라 할 수 있음.

〈표 14〉 2020 한국의 유망산업 선정- 14개 분야 41개 산업/제품

산업	기술 세부 분야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바이오신약 / 바이오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DMB / 텔레매틱스 / 차세대이동전화 / 홈네트워크 / 유비쿼터스 컴퓨팅
차세대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 홀로그램 네비게이터 / LCD / OLED
신개념 컴퓨터	착용식 컴퓨터 / 고성능지능 분산컴퓨터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 연료전지 자동차 / 친환경 자동차
콘텐츠 사업	문화콘텐츠 / 게임
의료 서비스	난치병 예방, 치료 서비스 / 노인성 질환 치료 서비스
차세대 에너지	2차전지 / 태양전지 / 수소에너지
로봇	산업용 로봇 / 서비스 로봇
첨단 화학소재	인공지능 폴리머 / 전자정보용 정밀화학 소재 / 친환경 화학소재 / 나노섬유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고부가가치 선박 / 차세대 우주항공
초정밀기기부품	초미세 공정기기 / MEMS / 첨단센서 / 실버의료기기 / 바이오칩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	지능형 유연생산시스템 / 고기능 환경설비 / 고효율 발전설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기도 미래전략산업 도출



〈그림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전략산업 도출 프로세스

- 주 : I그룹(단기적으로 사업화가 유망한 분야)  
 II그룹(타 지역과 비교하여 경기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  
 III그룹(미래시장 측면에서 경기도가 특화 가능한 전략적 투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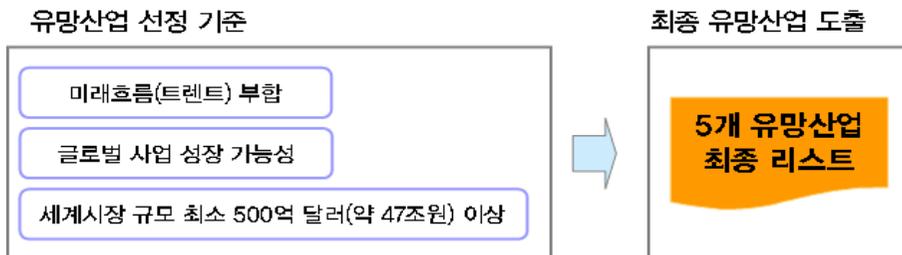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7개 유망산업은 아래와 같음.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유망한 분야로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신약 및 U-Health 산업이 선정됨. 타지역과 비교하여 경기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로서 텔레매틱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선정됨. 마지막으로 미래시장 측면에서 경기도가 특화 가능한 전략적 투자분야로서 U-Biz(RFID) 및 지능형로봇 산업이 선정됨.

〈표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경기도 전략산업- 7개 산업

산업	기술 세부 분야
단기적 사업화 유망분야	나노전자 소재 바이오 신약 U-Health
경기도 강점 산업 분야	텔레매틱스 디지털 콘텐츠
경기도 특화 가능 전략적 투자분야	U-Biz (RFID) 지능형 로봇

### □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미래유망산업

-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이 도전해야 할 5대 미래유망산업을 선정하였음.
- 유망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미래 흐름(트렌드) 과 부합할 것, 둘째 글로벌 사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셋째 세계시장 규모가 최소한 500억 달러(약 47조원) 이상일 것임.



〈그림 7〉 삼성경제연구원의 유망산업 도출 방법

-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5대 산업은 첫째, 태양광·연료전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둘째 병원 밖으로 나온 생명산업, 셋째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부티크·투자은행, 넷째 오감을 활용하는 뉴정보기술, 다섯째 도시인구의 농촌인구 대역전극이 만들어낸 도시화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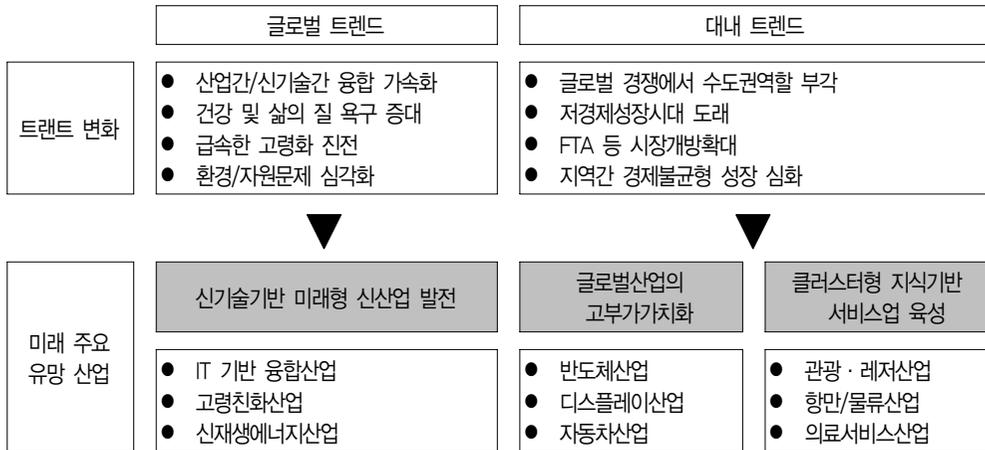
〈표 16〉 삼성경제연구소의 선정한 미래유망산업

산업	2015년 시장규모 및 핵심 품목
에너지 산업	1672억 달러 (태양광 + 풍력 + 바이오연료 + 연료전지)
생명 산업	3164억 달러 (U-Health + 바이오신약)
부티크·투자은행	2조 7191억 달러 (자산관리 IB)
뉴정보기술(IT)	4700억 달러 (PC + 홈네트워크 + 지능형 로봇 + RFID)
도시화 산업	1조 8970억 달러

### 3.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전망

#### 1)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 산업연구원의 2020 한국의 유망산업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유망산업 및 삼성경제연구소의 유망산업에 대한 근거를 참조하고, 자체 분석 조사한 2020년 산업전망 및 산업별 대내외적 환경변화(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의 전략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선정함.



## 2)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선정사유

### □ 미래형 신산업

- IT기반융합산업 : 향후 산업간 그리고 신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2020년 이내에 융합기술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경기도는 IT, BT산업이 전국 대비 40%이상 집적되어 있어 한국의 IT기반융합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산업 :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의 고령비율이 2000년 7%에서 2018년 14% 및 2026년에는 2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도 2020년경에는 고령비율이 14%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또한 전국 대비 40%이상의 고령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더욱 경기도는 고령친화단지에 대한 적지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가질 전망임.
- 신재생에너지산업 : 에너지 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될 것임. 동시에 산업발전에 의한 환경·자원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 1차전지, 환경산업의 전국 대비 비중이 높아 태양광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에 대

한 발전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경기도의 산업전망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미래 집중 투자하고 산업입지를 넓혀야 할 산업을 선정함.

산업	주요 품목
IT기반 융합산업	바이오신약 나노전자소자, 서비스용로봇
고령친화산업	U-헬스케어 난치병·노인의료 서비스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소전지, 연료전지 태양광전지

#### □ 글로벌산업

-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산업 등은 경기도의 산업전망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미래 집중 투자하고 산업입지를 넓혀야 할 산업임.
- 반도체 산업 : 경기남부지역에 글로벌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생산액기준으로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반도체분야에서도 국가적으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산업임.
- 디스플레이산업 : 경기북부와 서부지역에 글로벌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생산액 기준 전국 대비 5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분야에서도 국가적으로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산업임
- 자동차산업 : 경기서부에 국가적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생산액기준으로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산업임.

□ 클러스터형 지식기반서비스업

- FTA 확대에 따라 주로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동북아 경제권이 FTA 추진으로 역내교역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2010년 이후에는 전 세계 GDP, 세계교역량의 30% 이상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됨.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중국 등 대규 모시장과 인접해 있어 대형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관련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 며 대형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을 특화발전시켜야 함.
- 따라서 클러스터형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이러한 미래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를 예상 하고 경기도의 산업전망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미래 집중 투자하고 산업 입지를 넓혀야 할 산업임.

산업	주요 전략
항만물류산업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연계
의료서비스산업	병원, 노인의료서비스 등을 관광레저와 연계
관광레저산업	관광/레저/여가산업, 전시컨벤션산업, 리조트/호텔

- 특히 경기도에는 유니버설스튜디오의 유치, 선감해양체험관광지구 개발, 포천 에코시 티 개발 등 중국겨냥 관광발전가능성이 높고,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평택의 항만물 류, 파주에 남북교류를 위한 내륙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경기도는 서 울에 인접한 관계로 관련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 등 산업 집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3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 방향과 타당성 검토

---

제1절 새로운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제2절 새로운 산업입지정책 방향

제3절 기존 공업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

제4절 기존 산업입지정책의 활용성 검토



## 제3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방향과 타당성 검토

### 제1절 새로운 산업입지정책 도입 필요성

#### 1. 미래유망산업의 전략적인 유치

- 경기도는 서해안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도 3대 신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 지역들의 전략은 우선 서해안을 중심으로 관광레저휴양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 마리나단지 조성, 업무비즈니스지구 조성 등 클러스터형 복합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담고 있음. 또한, 북동부지역도 관광레저단지, 고령친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구상을 가지고 있음. 즉 4만불 시대에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서 의료/관광레저/고령친화 산업의 복합화와 대형화를 이룬다는 계획임.
- 그러나 이들 단지 및 지구에 관련 기업들이나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핵심앵커시설이나 핵심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즉 국내외 메이저급 시설 및 기업들의 유치가 지구 및 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 예를 들면, 의료관광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앵커시설인 국제인증 받은 대형종합병원, 5성급/6성급 호텔, Beauty Complex시설 등의 유치촉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대기업의 연구시설의 유치를 촉진하며, 또한 업무비즈니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형금융기관 등의 유치 촉진 정책이 필요함. 이와 같은 단지내에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핵심 앵커시설 및 핵심유망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이나 도시개발지원정책, 관광지조성정책과 차별화

된 새로운 입지정책이 필요함.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기존의 입지정책으로는 미래유망 산업 중 핵심앵커시설이나 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계획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앵커시설 및 앵커기업(핵심연구소)을 산업단지내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일정한 면적을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여 경기도/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착수한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전략산업육성지구와 같은 개념으로 이 지구를 지정하여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관련 핵심시설/앵커기업 등을 유치한 좋은 사례임. 광교테크노밸리는 수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는 나노, 바이오, 반도체 등의 융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의 I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음. 그러나 이들 사업은 경기도 전체의 맥락에서 종합적인 경기도 제도를 하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도지사 및 경기도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계획되고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 대도시내 노후공업지역 및 대기업이전적지의 최적 활용

- 안양과 군포 등과 같이 노후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에서 신산업에 대한 입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및 개발업자는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개발하려는 욕구가 크게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미래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이 지역을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하여 IT융합연구소, 기업본사/지사, 사업서비스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또는 민간제안의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여 미래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할 수도 있음.
- 물론 대도시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및 대기업이전적지를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이 지역들을 어떻게 활용할 가를 사전에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서울시와 같이 준공업지역을 공장점유율 상황에 맞추어 산업존과 주거존을 적절히 할당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면서 산업도 유지시키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3.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정책과의 연계/조정 강화

- 경기도에는 시군차원에서 전략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과천정보타운, 수원광교 테크노밸리, 성남 메디밸리, 고양 브로맥스, 화성 송산테크노밸리 등 10개 정도의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있음. 그러나 이들 계획들은 경기도 종합적인 산업정책과 연계를 가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고 판단됨.
- 이들 계획들 중에서 사업성도 있으면서 경기도 산업육성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은 인센티브정책을 활용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핵심앵커시설 및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과천정보타운에 금융비즈니스지구를 지정하여 금융기관, 비즈니스기업, 기업본사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또한 고양시에 특수효과스튜디오를 유치한다던지, 화성시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내 국내의 대기기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음.

### 4. 경기도 주도의 새로운 입지정책 수립 필요

- 기존의 중앙정부차원의 입지지원정책으로는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주도의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입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센티브정책도 수도권외의 경우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 따라서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인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새로운 산업입지정책 방향

### 1. 새로운 입지정책방향 - 전략산업육성지구

- 경기도에는 서울의 여의도, 강남, 용산 등과 같은 업무지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생산자서비스 기업 또는 생산자 서비스업종과 연계된 산업들이 입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경기도에는 향후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과 같은 기존의 대도시에서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가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과천 정보타운 등과 같은 신도시지역에 새로운 개념의 업무지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이들 업무지구내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국내 대기업의 제2본사와 외국 기업(해외 R&D 센터, 제2~제3의 동아시아 영업본사 포함)이 유치된다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음. 특히 국내외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지구와 상업·주거 기능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입체복합형 업무지구 개발은 미래유망산업을 육성/유치하는 데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
- 전략산업육성지구는 이와 같은 업무복합기능이 형성된, 또는 형성될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전략적인 앵커핵심시설 유치가 필수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즉 관광/레저복합지구내 일정한 지역, 산업단지내 일정한 지역, 공업지역 및 대기업이전적지내 일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전략산업육성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흥지구로서 유치 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R&D형(제조업), 관광·물류형, 창조산업형(생산자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는, 경기도에서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특화산업)에 관련 외국기업 및 연구소 등의 R&D 시설을 집중시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경우임.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시, 중국 중관촌,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 영국 캠브리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산업시설, 주거시설, 대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연구소, 공원 등이 도입요구기능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의 핵심시설은 산업시설, 주거시설, 연구소, 대학교, 공원, 외국인학교 6개 항목이며 중요시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국제공항, 국제항구, 산업지원 시설 5개 항목임.

〈표 17〉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기능 검토

사례	R&D면적	개발주체	도입기능
일본 도요타시	8780만평	Toyota	- 자동차관련산업(제조업 출하액의 95%) - 고급주택, 병원, 문화시설 건립 - 도요타 공업대학
중국 중관촌	1억1117만평	중앙정부	-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 68개 각종 고등교육기관 - 중앙과학연구원으로 대표되는 200여개의 과학 연구소 - 8,000여개의 첨단과학기술 기업, 수천 개의 연계기업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66만평	스톡홀름시, Kista AB	- 무선이동통신기업(에릭슨, MS, 컴팩, 인텔, 노키아 등) - 연구소(SICS, SIT, ACREO 등) - 대학(스웨덴왕립공대, 스톡홀름 대학)
핀란드 울루시	130만평	중앙정부 ,Nokia	- 무선이동통신기업(노키아, HP, 후지쓰, 스펙트라, SUN 등) - 기술연구센터(VTT) - 울루대학, 폴리테크닉 등의 교육기관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60만평	중앙정부 ,SYMISA	- 150여개의 외국기업 - 외국인학교시설(2개의 대학, 4개의 초중등학교) - 녹지가 65%로 쾌적한 환경 유지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16만평	캠브리지 대학운영 위원회	- 대학주체의 산학협력 연구소 -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학, 전자기기, 레이저 등

- 관광·물류형 전략산업육성지구는, 접근성이 원활한 지역에 컨텐츠, 문화, 레저 등 고용창출과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전국의 교통과 통신망이 관통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형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임. 관광·물류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일본 유니버설스튜디오, 홍콩 디즈니랜드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싱가포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테마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시설, 국제공항, 국제항구 등이 도입요구기능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관광·물류형 전략산업육성지구의 핵심시설은 상업시설, 테마파크, 숙박시설, 편의시설, 스포츠시설, 국제공항, 국제항

구 7개 항목이며 중요시설은 산업시설, 문화시설, 공원 3개 항목임.

〈표 18〉 관광·물류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가능

사례	관광면적 물류면적	개발주체	도입가능
미국 디즈니월드	3,330만평	Disney	- 4개의 테마파크(매직킹덤, 엠콧센터, MGM 스튜디오, 애니멀 킹덤) - 부대시설(워터파크, 호텔, 상업시설, 골프장 등)
미국 디즈니랜드	22.6만평	Disney	- 디즈니 최초의 테마공원(8개의 테마 랜드) - 150여개의 호텔, 모텔 - 450개가 넘는 식당
도쿄 디즈니랜드	25만평	오리엔탈 랜드	- 7개 테마로 구성된 테마파크(14만평) - 주차장(7만 3천평, 8,000대 수용) - 숙박시설, 편의시설(3만 7천평)
유니버설 스튜디오저팬	16.3만평	오사카시 , 유니버설 스튜디오	- 7개의 존에 18개의 스튜디오 형 시설 - 복합 상업시설(City Walk), 골프장, 캠핑장, 스포츠센터 - 공식호텔 2개소
홍콩 디즈니랜드	12만평	홍콩정부 Disney	- 1개의 홍콩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 2개의 호텔 - 상점, 음식점, 오락시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6,625만평	암스테르담시	- 스키폴공항(유럽 4대 공항, 물동량 3위) - 암스테르담항구(유럽 5대 항구) - 외국기업 1300개 입주, 연 4천만 명의 관광객
싱가포르	2억 1000만평	싱가포르	- Changi 공항(항공수송량 10위) - 싱가포르 항(물동량 세계 2위) - 세계 물류센터 4위

-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는, 컴퓨터, 공학, 건축, 자연과학, 교육, 미술, 디자인, 사업관리·재정운영, 법률 등의 창조산업의 창의성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내에서 지정되는 경우임.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록본기 힐스, 일본 미나토미라이 21, 미국 록펠러 센터, 프랑스 라데팡스, 독일 뒤셀도르프, 서울 상암 DMC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공원, 문화시설, 대학교, 산업지원시설(금융, 법, 광고서비스), 연구소 등이 도입요구기능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의 핵심시설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연구소, 대학교, 숙박시설, 공원, 산업지원시설 9개 항목이며 중요시설은 외국인학교 1개 항목임.

〈표 19〉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위한 도입가능

사례	복합면적	개발주체	도입가능
일본 록본기힐스	2만5000평	Mori Building Company	- 업무시설(54층 모리타워) - 상업시설(힐리우드뷰티플라자, 케야사카콤플렉스) - 호텔 - 주거시설(록본기힐스레지던스) - 녹지공간(대지면적의 절반, 기존 연못과 녹지보전) - 방송국
일본 미나토미라이	56만평	요코하마시	- 문화시설(랜드마크홀) - 업무, 상업시설(73층 랜드마크타워) - 호텔 - 방송국(TV 아사히)
미국 록펠러센터	2만7000평	록펠러재단	- 업무, 상업, 문화, 오락시설(70층 GE건물, 21개 빌딩, 노천카페, 아이스 링크)
프랑스 라데팡스	250만평	라데팡스 개발위원회 (EPAD)	- 국제회의장 - 영화관 - 고층아파트(2만가구) - 10여개 학교(오페라학교, 건축학교)
독일 뉘셀도르프	6564만평	뉘셀도르프시	- 베스트팔렌주 예술박물관, 시립 예술전시장,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명예의 전당 - 방송, 정보, 통신 관련 산업(시 고용의 10%) -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현대식 업무, 주거공간
한국 상암DMC	17만평	서울특별시	- 디지털미디어기업단지(정보미디어 분야의 기업, 방송국) - 산업지원시설(상암 Messe, 회계, 법률, 광고 서비스) - 연구교육시설(신촌 대학과 연계, Science Park)

○ R&D형, 관광·물류형, 창조산업형 등 전략산업육성지구의 도입시설과 주요시설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및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8〉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유형별 주요 시설

〈표 20〉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유형별 도입 시설

도입시설	R&D형	관광·물류형	창조산업형
산업시설	●	○	△
주거시설	●	△	●
업무시설	○	△	●
상업시설	○	●	●
문화시설	△	○	●
연구소	●	—	●
대학교	●	—	●
테마파크	—	●	△
숙박시설	△	●	●
편의시설	△	●	△
스포츠시설	—	●	△
국제공항	○	●	△
국제항구	○	●	△
공원(녹지)	●	○	●
외국인학교	●	—	○
외국인병원	●	○	○
산업지원시설	○	△	●

주 : ● 매우중요 ○ 중요 △ 보통 — 낮음

## 2. 상위법에 의한 제도적 배경

### 1) 개발진흥지구예 준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1항 및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함. 제37조제3항의 조항에 의하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는 준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

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와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양분된 용도지구제를 개발진흥지구로 단일화 하였고, 개발진흥지구로 통합되기 이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는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1조 2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종전의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함.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 없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함.
-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함.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지정되지 않음.
-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 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복합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유치되는 기능에 따라 지구의 성격 및 세분 내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입지기준을 적용함.

- 특정개발진흥 지구는 위에서 언급한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함.

## 2)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방법 및 인센티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그 지역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건축행위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및 그 밖의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용도지구 이외의 지구에 대하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제6장에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 건폐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8항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완화적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첫째,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동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둘째,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를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3절 기존 공업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

### 1. 군포시 당정공업지역<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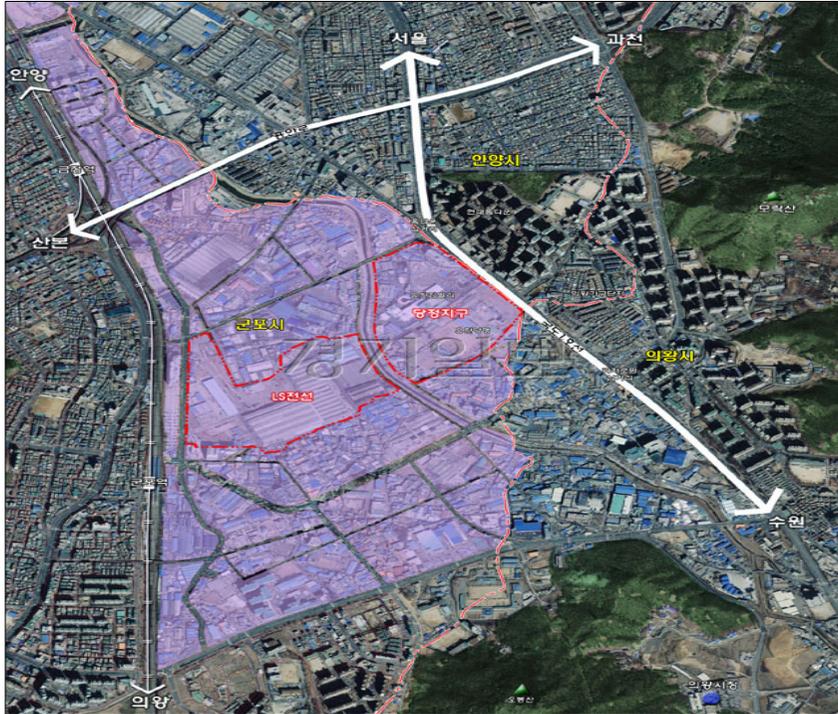
#### 1) 군포시의 발전구상

- 시는 현재 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공업지역을 보전, 개선, 특화,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5년 단위로 정비에 나설 방침임.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한 당정동 유한양행 부지 일원 21만2천㎡에 대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임. 특히 시는 전북 전주로 공장이전을 마친 LS전선 부지 24만㎡에 대해서도 유한양행을 모델로 삼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방침임.
- 토지주 등이 참여한 자체개발을 추진하면 그만큼 기반시설 확충을 소홀히 해 공업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는 당정공업지역의 열악한 도로 개선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 부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시가 추진하는 유한양행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공장, 학교,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1만㎡ 이상 부지와 주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는 군포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것임. 시는 이 과정에서 토지주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 부담률을 31%로 확정할 바 있음.
- 특히 시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현 300%에서 350%이하로 상향 조정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임. 대로변 부지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문화 및 판매시설, 운

---

1) 경기일보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2008/5/22 기사를 요약 발췌한 내용임

동시설, 업무시설, 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2) 군포상공회의소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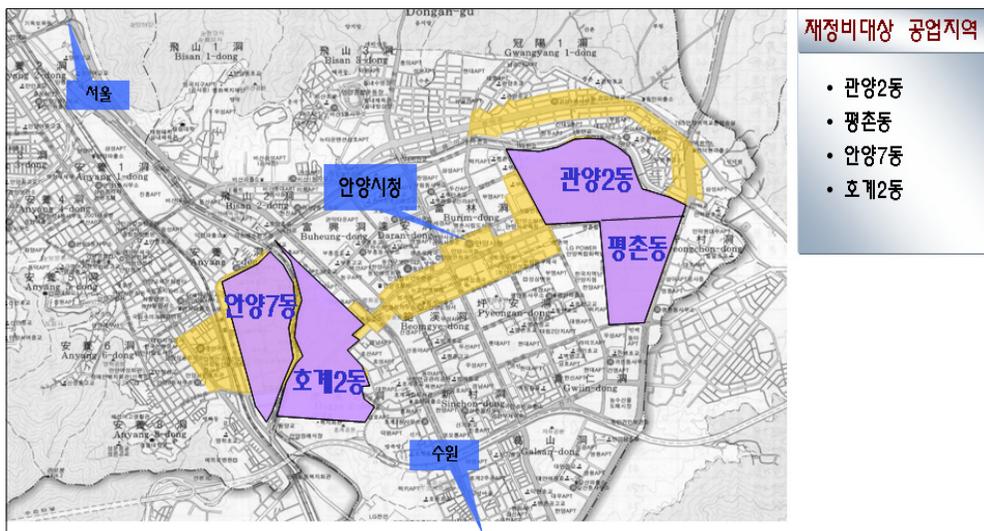
- 군포상공회의소는 시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그 이유는 당정공업지역은 R&D(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식생태계 형태의 복합기능을 갖춘 지식산업기술단지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 산업기술단지 지정과 대덕연구단지 같은 연구특구 지정을 원하고 있음. 군포상의는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중인 4~5개 대기업 등의 부지 140만~200만㎡ 일원에 서울 명문 공대와 국책연구기관, 시설인증기관 등을 총괄 유치해 연구개발전문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군포상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땅값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군포시입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2. 안양시 공업지역

### 1) 안양시의 발전구상

○ 안양시의 공업지역은 크게 4개 지역으로 공업기능이 강한 지역과 상업기능이 강한 지역, 주거기능이 강한 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공업지역내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기업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 대기업이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에 맞추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양시 재정비 대상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음.



### 2) 관양2동 공업지역

○ 주거기능이 없고 공업기능만 있는 지역으로서 가로망계획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지역이며, 평촌권과 연계되어 있고 인덕원사거리를 정점으로 서울이나 외곽순환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400만원 이상 하는 지역임.

- 관양2동에는 제조업체 500여개, 종업원 8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 IT서비스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서, 특히 공업지역 내 대한전선과 크라운제과와 같은 대기업 공장이 입주하고 있음. 또한 관양2동 공업지역 내에는 동일테크노타운 1차, 2차, 3차, 7차, 안양매가벨리 등의 아파트형공장이 입지하고 있음.
- 현재 공업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용도는 공업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에도 공업용지로 되어 있음. 즉 이 지역은 공업기능이 상당히 우세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공업기능을 유지하되 첨단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임.
- 재정비방향 :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업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기반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도로정비,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한 과제일 것임.
- 대기업이전적지 활용방향 : 크라운제과가 만약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 대체기능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유도함. 단, 크라운제과 주변에 동일테크노타운 1차, 2차, 3차, 7차, 안양매가벨리 등의 아파트형공장이 입지해 있고 향후 다른 형태의 아파트형공장이 입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라운제과 이전부지에 아파트형공장 입주 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주차장 확충방안이 먼저 계획되어야 할 것임. 대한전선이 이전한다면 그 부지에 도시형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치업종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안양시의 전략산업인 R&D형 기업과 IT서비스업 형태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R&D형 기업 : 디스플레이, 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업체
  - IT서비스업 : 멀티미디어콘텐츠, 임베디드 SW

### 3) 평촌동 공업지역

- 공업기능이 거의 없고, 의류매장,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많이 입지되어 있어

상업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임, 평촌동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상 터미널부지가 지정됨에 따라 유통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터미널은 민간개발로 이루어져 유통시설비중이 높은 복합형태의 건물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공업기능이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용도는 공업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음.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 공업보다는 상업과 주거 위주의 개발이 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관리방향 : 현재는 공업지역이지만 향후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주거와 상업용도로의 개발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합산업지역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IT산업과 연구개발 및 유통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함. 이 지역을 주거와 상업시설위주로 개발된다면 안양시 산업구조고도화계획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자족성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산업구조고도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첨단업종을 지원하는 고차 IT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서비스위주의 복합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비싼 토지가격에 맞추어 이 지역을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용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은 의류섬유계통의 클러스터존, 유통시설존, 업무시설존, 일부주거시설존, 공공시설(학교포함)존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학교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방식을 도입함.

#### 4) 안양7동 공업지역

- 안양7동 북동쪽은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으나, 그 외 일반공업지역 내에는 가로망계획도 잘 되어 있어 공장들이 비교적 계획적으로 입지하고 있음.
- 안양7동에는 제조업 대 서비스업 비율이 종사자수 기준으로 68대 32로서 제조업 비

중이 안양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임. 안양7동에는 제조업체가 약 700개, 9,000여명의 종업원이 있고 주로 기계, 전자 등의 업종이 많은데 반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관련업체는 거의 없는 편임.

- 2005년까지 유천팩토피아, 동일테크노타운 5차, 동영벤처스텔 3차, 5차, 성일디지털 타워, 명지이스페이스 등 6개의 아파트형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3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음. 최근에는 아파트형공장이 추가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 입주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함.
- 현재의 용도가 공업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음. 북쪽은 준공업지역으로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으나, 그 외 일반공업지역 내에는 공장들이 비교적 계획적으로 입지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함.
- 관리방향 및 재정비방향 : 현재용도가 공업지역이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기능의 이전압력 및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양7동은 전통적으로 공업지역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공업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일부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복합용도로 개발방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공업시설이 전혀 없는 자족성 없는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검토하여 복합지구로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서울시의 산업개발진흥지구나 복합개발진흥지구와 같이 전략적으로 산업을 유치지원하기 위한 지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안양7동지역에서 공업지역이 강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공업용도 : 복합용도 : 주거상업용도 등으로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5) 호계2동 공업지역

- 호계2동 공업지역에는 대기업인 효성공장 90%의 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되었고, 나머

지 10%만이 남아 있으며, 주변부지는 물류시설로 활용되어 공업기능이 거의 소멸되었음. 또한 인근지역에도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업기능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방향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임.

- 호계2동에는 종사자수 기준으로 제조업 대 서비스업 비중이 46% 대 54%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또한 서비스업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제조업 체수는 200여개 업체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4000여명 정도 있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은 거의 없는 편임. 즉 서비스업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유통 및 일반 상업, 음식점업 등의 소비형 서비스업이 주로 입지되어 있는 실정임.
- 현재 용도가 공업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설정되어 있어 주거용도로의 압력이 강한 편임. 현재의 관리는 공업용도로서 관리되고 있으나, 아파트와 근생시설 등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공혼재의 양상도 띠고 있어 공장은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음.
- 관리 및 재정비방향 : 주민의 혐오시설이 아닌 첨단업종 및 연구소 기능을 갖춘 공업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일부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복합용도로 개발방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향후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공업시설이 전혀 없는 자족성 없는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복합지구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전략산업육성지원조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안양시에서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가 필수적인 지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효성 대기업이전적지 활용방향 : 산학연지구(복합용도로 개발)로 조성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존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자족성을 나타내는 연구존과 산업존은 최소 30%로 하고 주거존과 업무존을 1

최소 50%이상으로 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산업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전략적인 입지지원방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존(연구소유치, R&D시설 유치)
- 산업존(벤처R&D형기업 유치)
- 주거존(일부 주거시설 허용)
- 업무존(오피스빌딩 건설 - 기업들의 오피스수요 충족)

### 3. 서울시 준공업지역<sup>2)</sup>

####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특정 사업구역 내 공장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10~30% 미만일 경우 해당 구역면적의 20%에만 대체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80%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체 산업시설로는 아파트형 공장, 전시장,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 등임.
- 공장비율이 30~5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7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50% 이상이라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됨.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인 사업구역 1만㎡에서 현재 공장 비율이 20%라면 사업구역의 20%인 2000㎡는 산업시설 부지가 됨. 나머지 8000㎡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됨.
- 서울시는 또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등 대형공장의 경우에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직주근접형 산업공간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은 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2) 한국경제,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건립 60-80%까지 허용" 2008/6/30 기사에서 요약 발췌함.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서만 허용해줄 방침임. 시는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함께 건립할 경우 현재 250%인 허용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줄 방침임.

#### 4. 인천시 공업지역<sup>3)</sup>

- 인천시는 노후된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31개 ‘지역산업 육성사업지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개발·지원할 계획임.
- 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미비해 전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돼 분리가 어려운 지역 등임. 지역별로는 서구 가좌·원창동, 남구 도화동 일대 10.07km<sup>2</sup>, 부평·계양구 일대 6.64km<sup>2</sup>, 남동구 간석·고잔동 일대 0.85km<sup>2</sup>, 중구 북성·연안동, 동구 만석동 일대 0.72km<sup>2</sup>, 서구 검단, 강화군 일대 7.88km<sup>2</sup> 등임.
- 지역산업 육성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시·구·군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세워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됨. 이들 사업지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할 수 있게 됨. 또한 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감면 혜택이 제공됨.
- 인천시는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음. 인천시는 올해 안에 조례 제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임.

---

3) 연합뉴스, “인천시 지역산업 육성사업지구 지정한다” 2008/9/22 기사에서 요약 발췌함.

## 제4절 기존 산업입지정책의 활용성 검토

### 1. 산업입지정책

#### □ 정의

- 산업입지라 함은 기업이나 산업이 그 특성에 따라 이윤극대화를 위해 특정공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함. 산업입지는 일반적으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구분됨. 개별입지는 난개발(환경문제, 기반시설부족 등)을 유발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계획입지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계획입지는 협의로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 아파트형공장, 산업관련 지구 등도 포괄하여 해석할 수 있음.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그 해당토지의 개발주체와 개발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됨. 일반적으로 개별입지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개발하여야 하며 공장설립을 위한 개별입지지정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고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각종 인프라시설구축 등을 개별업체가 직접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계획입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장, 지식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유통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일단의 단지로서 대부분 입주, 공장 신·증설 등에 관한 각종 인·허가에 규제가 없는 상태임.
- 산업입지정책은 이러한 광의의 개념인 계획입지를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의미함. 다른 정의로는 산업입지정책은 특정기업군이나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 혹은 지역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군의 입지공간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계획적 개입' 이라고 할 수 있음(조정래 2003, 박희석 2005). 산업입지정책은 토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와 같은 도시공간정책적 지원수단과 함께 행정·조세지원, 인력지원과 같은 산업정책적 지원수단도 병행되는데, 지원되는 형태도 산업단지형만 아니라 산업지구 혹은 산업시설의 형태도 가능함(박희석 2005).

## 2. 산업입지정책수단의 유형

-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도된 산업입지지원시책은 1990년대 들어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지정방식 및 규모에 따라 크게 산업단지형, 산업지구형, 시설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sup>4)</sup>.

### 1) 산업단지형

- 산업단지 조성목적의 정책수단에는 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복합단지 등이 있음.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는 각각 외국인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만을 위한 산업입지정책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산업기술단지도 테크노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고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에서 조성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전략산업육성지구를 검토함에 있어 R&D형지구는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조산업형지구는 문화산업단지를 비교분석대상으로 함.

4)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2005, 박희석)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이 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3, 조정래)와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2003, 박영철 외)에서는 산업입지지원시책을 지정방식 및 규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지구, 시설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 2) 산업지구형

- 산업지구형 정책수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관련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짐. 대표적인 산업지구형 정책수단으로는 관광특구와 문화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이 있음
- 전략산업육성지구를 검토함에 있어 R&D형지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창조산업형지구는 관광특구와 문화지구를 비교분석대상으로 함.

## 3) 시설형

- 시설형 산업입지정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아파트형공장 등이 해당됨. 시설형 입지시책은 본 연구의 전략산업육성지구와 성격이 달라 비교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21〉 산업입지정책수단별 지원수단 비교

구분	도시정책지원수단				산업정책지원수단			
	토지지원	주변환경 정비지원	업무지원 시설지원	기반시설 확충지원	조세금융 행정지원	기술경영 법률지원	교육훈련 양성지원	교류협력 지원
산업 지구 형	산업단지	○	○		○			
	벤처단지	○	○	○	○			
	문화단지	○	○	○	○			
	산업기술단지	○		○	○	○	○	
	유통단지	○			○			
산업 지구 형	벤처지구			○	○			
	진흥단지	○		○	○			
	문화지구			○	○			○
	지식기반집적지구	○		○	○			
시설 형	벤처집적시설	○		○	○			
	진흥시설	○		○	○			
	창업센터	○		○		○		
	신기술센터	○		○		○	○	○

자료 :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이 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정래, 2003),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박희석) 재정리

### 3. 기존 유형별 산업입지정책의 활용가능성

#### 1) 도시첨단산업단지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 단지로써,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이고, 10만<sup>m</sup>2 미만의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은 없었으나 현재 계획 중인 곳은 군포첨단산업단지와 광명첨단산업단지가 있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첨단산업단지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앵커시설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이때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된 곳은 산업단지조성시 지원받는 인센티브와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누리는 인센티브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들(예 : 택지개발로부터 발생한 지원시설부지를 첨단용지로 활용하는 경우, 노후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 등) 중에서 시군에서 첨단단지(테크노밸리)로 계획이 있는 경우 시군에서 요청하면 핵심앵커시설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2)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지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입지정책의 정책수단으로는 문화산업단지, 문화지구 등이 제도화되어있음. 문화지구는 문화시설 및 문화관련 영업시설이 밀집되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조성될 지역,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한 지구지정방식에 의해 지정됨. 지원내용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용자지원 등이 있음(박희석 2005).

- 문화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문화산업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집단화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시책으로서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지원, 부담금 면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입지정책은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못하고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데 한계점을 지님.
-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은 없으나 문화지구는 파주를 비롯한 몇 개 지역에 지정된 바 있음. 문화산업단지나 문화지구가 조성된다고 해도 문화산업의 핵심앵커시설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중복지정할 수 있음. 이때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된 곳은 문화산업단지나 문화지구에서 지원받는 인센티브와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누리는 인센티브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도록 함.

### 3) 과학연구단지 : 「과학기술기본법」

- 광교테크노밸리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과학연구단지 지정요건에 부합됨으로 광교테크노밸리와 경기테크노파크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면 이 두 곳을 유명한 융합기술단지 브랜드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임.
- 지원사항은 과학연구단지내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연구장비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광교테크노밸리내 바이오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관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정된 곳이 없고, 비수도권에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곳이 지정되었음(전북, 광주, 오창, 강릉, 부산, 대구과학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수도권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정부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에 과학연구단지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함.

- 따라서 광고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첨단R&D단지를 경기도 주도의 R&D형 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여 핵심앵커시설 및 기업을 유치/육성하도록 함.

####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제도임. 경기도에는 부천, 성남, 안산, 안양 등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및 사업지원, 자금지원, 부담금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벤처기업이라는 특정산업에 국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벤처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연관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며, 또한 산업집적지역 등 공간단위의 시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박희석 2005).
- 따라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첨단R&D단지(테크노밸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첨단앵커시설/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5)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지식경제부 주관하에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육성, 지식기반산업의 합리적 재분배 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집적지구를 말함. 여기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법,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함.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첫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촉진사업 등의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음.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 안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셋째, 집적지구 안의 용지확보와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 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박희석 2005).
- 아직까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창조산업형 전략산업육성지구와 거의 같은 개념임.

#### 6) 산업기술단지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연구개발,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유통,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술실용화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정의될 수 있음. 산업기술단지 사업의 목적은 기업·대학·연구소 등 지역의 기술혁신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연계시키고, 지역의 혁신기능 들을 네트워킹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신산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지역혁신체제(RIS)를 강화하는 것임(박희석 2005).
-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정책은 원활한 입지공급, 자금공급, 인력공급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지원내용은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 및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 그리고 입주경영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와 기술인력 지원 등을 포함함.

-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공공)와 대진테크노파크(민간) 등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차원에서 지식경제부가 경기도에 테크노파크를 추가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군의 첨단R&D단지를 테크노파크로 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제4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전략

---

제1절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의 선정방법

제2절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의 제도적 지원방안

제3절 서울시 사례분석: 산업개발진흥지구

제4절 전략산업육성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 제4장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전략

### 제1절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의 선정방법

#### 1. 선정필요성

-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산업입지 지원제도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산업입지관련계획이 중앙단위에서 수립하며 관련 지구나 단지 지정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육성을 위해서 경기도 주도로 산업입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단으로 전략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하는 것임.

#### 2.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 후보지 분석

-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첫째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구지정 대상지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경기도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신청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음.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입지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수원 광고신도시 도시지원시설의 유치업종은 광고테크노밸리 1단계(4.6만평)와 연계

될 수 있는 R&D 및 지원기능(금융, 비즈니스 등)으로 R&D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유치업종은 교육·게임·생활·음반컨텐츠,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으로 R&D형과 창조산업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성남 메디바이오밸리의 유치업종은 의료서비스(병원), 의료기기, 생물산업 등으로 R&D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의 유치업종은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영상관련 교육시설 등으로 창조산업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화성 테크노밸리의 주요 도입기능은 교육집적기능(종합대학, 첨단과학교, 특화산업연구센터, 연수원), 연구집적기능(테크노파크, 연구소, 병원, 핵심R&D기업), 도시지원기능(비즈니스지원센터, 문화 및 상업복합시설) 등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IT 서비스업, 자동차산업, 생명과학산업 등으로 R&D형과 창조산업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높고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R&D형과 관광·물류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시흥 군자, 토취장, 폐염전 등은 서해안, 영동, 제2,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인전철 연계로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인 시화MTV, 송도신도시 및 소래 월곶포구를 연계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모든 유형별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광명 가학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유치업종은 IT, BT, NT, 자동차산업 등으로 R&D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부천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의 유치업종은 부품소재산업관련 연구기관 및 연관업체 등으로 R&D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의왕 포일 인텔리전트 타운의 유치업종은 첨단연구시설, 벤처집적시설 등으로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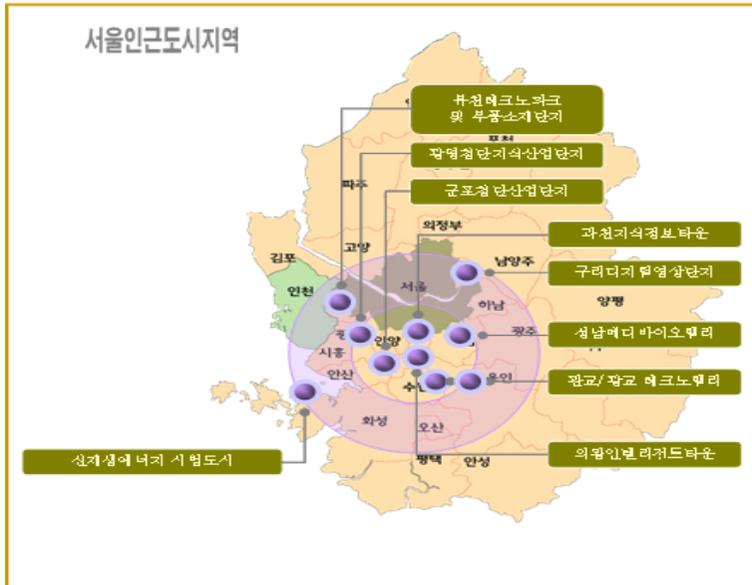
형과 창조산업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군포 첨단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첨단업종 전체로 구성되어 있어 R&D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구리 디지털 영상산업 및 첨단 중소기업단지의 주요 시설은 영상(첨단)산업시설, 교육시설, 지원센터 등으로 R&D형과 창조산업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양주국제화지구, 평택비즈니스지구, 동탄비즈니스지구내 일정한 공간은 창조산업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평택배후단지는 R&D형과 관광·물류형 지구의 도입이 가능함.
- 이외에도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의료관광복합단지, 해양복합산업단지, 군포 또는 안양 공업지역 재정비지구내에서도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이 가능함.

〈표 22〉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입지 가능 지역

구분	R&D형	관광·물류형	창조산업형
광고신도시 도시지원시설	○		
과천 지식정보타운	○		○
성남 메디바이오밸리	○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
화성 테크노밸리	○		○
시흥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MTV)	○	○	
시흥 군자, 토취장, 폐염전	○	○	○
광명 첨단지식산업단지	○		
부천 테크노파크 및 부품소재 단지	○		
의왕 인텔리전트 타운	○		○
군포 첨단산업단지	○		
구리 디지털 영상산업 및 첨단단지	○		○
양주국제화지구내			○
평택국제화지구내			○
평택배후단지내	○	○	
동탄비즈니스지구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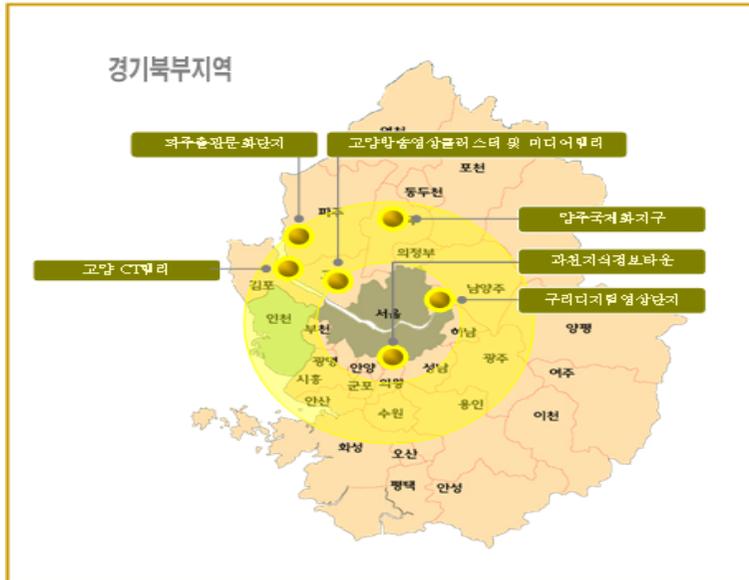
## R&D중심형 지구 후보지역



## 관광물류중심형 지구 후보지역



## 창조산업형 지구 후보지역



### 3. 전략산업육성지구 선정방법

#### 1) 선정기준

- 업종기준 : 경기도 미래신산업과 전략산업 중 핵심시설 및 앵커시설을 대상으로 함. 각 지구 내의 권장업종은 2개 이상의 복수지정이 가능함. 단, 이 경우는 중점 육성업종인 주업종과 연관업종인 부업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도 있음.
- 지역기준 :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해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지역, 관광레저육성을 위한 신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지원시설/기반시설 등 지역여건, 성장잠재력과 산업집적효과 정도, 지역내 개발계획과의 연계가능성, 경기도 산업육성계획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 세부요건 :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대상지역내 공장부지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도지사가 특히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육성 하고자 하는 지역, 또한 해당산업의 발전가능성(산업집적효과, 성장잠재력, 지역발전 기여가능성), 대상 지역의 적합성(교통접근성, 산업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정도, 업종의 분포 및 특성), 추진주체의 육성의지(신청기관인 시군 등)의 육성계획), 경기도 산업정책과의 연결성,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판별함.

- 면적기준 : 기업업무환경이 양호한 지역내에 최소지구면적은 클러스터기능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함.

## 2) 선정절차

- 전략산업육성지구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에서는 지정 후보지의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 판별요건에 따라 대상지 선정 심의를 하게 됨. 대상지 선정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지구지정 대상지를 선정함.
- 하향식 : 경기도에서 제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지구대상지 결정
  - 예 : 광고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 상향식 : 시군에서 신청을 하여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지구대상지 결정

## 3) 사업지구의 지원, 관리 등

- 지구내 지원사항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지구내 지원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해당지역 및 권장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수립하는 진흥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함.

-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레저단지, 준주거지역 등 기타 용도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함. 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업종별 클러스터를 추진할 경우에는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구지정 후 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관리하기 위해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진흥계획에는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 방안,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세부지원방안, 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등 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제2절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의 제도적 지원방안

### 1. 상위법과 전략산업육성지구와의 관계

- 전략산업육성지구는 국토이용및계획법 37조, 동법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근거하고 있음. 경기도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으나 주로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었을 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것은 아님. 또한 기존에 지정되었던 개발진흥지구에는 인센티브정책도 거의 없는 편임.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따라서 전략산업육성지구와 개발진흥지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곳을 국토이용및계획법 37조, 동법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도록 함.

## 2.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 □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 방향

- 현재 경기도에는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지원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경기도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상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법에 근거하여 가칭)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1안 : 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안 : 경기도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 경기도 지원조례에서 담아야 할 내용

- 조례를 제/개정시 담아야 할 내용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정의,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절차(상향식과 하향식),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기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정의와 수립방법 및 절차, 전략산업육성지구에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정책 등임.

## 3.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 전략산업육성지구내 부지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매입, 핵심시설 공동유치활동
-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지원 등
-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등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우선융자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등

### 제3절 서울시 사례분석: 산업개발진흥지구 5)

- 다른 시·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종전예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구를 변경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시세의 감면 등의 물리적·제도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 하는 각종 산업입지 지원제도의 대부분이 서울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략산업 및 기타 산업육성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산업개발진흥지구 정책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조례에서는 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제 54조 제7항, 제55조 제12항 항목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건폐율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개발진흥지구에는 조례 제54조 제1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5) 본 내용은 박희석(2005)에서 발췌하여 정리.

있도록 하고 있음. 용적률의 경우에도 조례 제55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3〉 산업개발진흥지구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 상황

구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제한	○ 제53조(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용적률	○ 제55조 제12항(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 이하(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100%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건폐율	○ 제54조 제7항(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자료 : 박희석(2005),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재정리

- 조례의 제3장 제11조 제14조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원혜택은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시세감면 등이 있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시장은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 에 입주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음.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원 사항으로 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건축제한의 완화, 건폐율·용적률 비율의 완화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의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에 입주한 기업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표 24〉 서울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원 사항 개요

정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시장이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제3장 제2조)	
목적	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함(제3장 제1조)	
근거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4.12.31)	
지원사항	기반시설공급 (제3장 제12조)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제3장 제13조)	시장은 당해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음. 완화에 적용되는 규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
	시세 감면 (제3장 제14조)	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시세를 감면할 수 있음. 감면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함

자료 : 박희석(2005),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재정리

## 제4절 전략산업육성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 1. R&D형 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 1) 과제

- R&D 센터를 유치할 경우,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발전과 기술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또한 R&D 센터의 유치는 외국인 연구개발 투자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창출하고 지적자본을 이전시킬 수 있음. 즉 외국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제품, 기술, 특히, 경영관리 능력 등 각종 경영자원의 이동을 촉진하고 특히 증대를 통해 고용 인력의 연구

개발 활동 증진 및 기업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관리 경험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지향형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다국적 기업의 선진기술, 경영기법 등 이전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개별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인적 자본, 물적 자본 등을 결합하여 지역 기업의 네트워크 지향형 경영마인드를 확산하여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R&D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의 R&D 기능을 강화하거나 해외에 R&D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며 연구 방식은 모국 집중형 R&D 방식에서 R&D의 네트워크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R&D센터를 유치하기에 상대적으로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아 외국 R&D 센터가 고급 기술을 국내 기관에 이전할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연구기지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2) 추진 방향

- R&D 센터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투자 인센티브를 개발함.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분 참여, 경기도 연구개발 매칭펀드 지원, 연구센터 임대료 지원, 특허권 및 지적 재산권 수입의 세금 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마련하고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경기도 사업의 수주 우선권 부여, 경기도 과학기술프로젝트 참여 등 시장 우대 정책을 실시함.
- R&D 센터 인력 지원을 위해 재외 과학기술인력 DB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건비를 보조함. 이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시키는 System Organizer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수의 해외 R&D센터가 상해, 북경 등에 중첩하여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D 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 R&D 센터와의 연계화를 추진하고 해당 시설의 분원을 유치함. 이를 통해 중국과의 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가치사슬의 고부가가

치 부문을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음.

### 3) 기술 수준별 R&D 센터의 맞춤형 유치전략 추진

#### □ 고기술↔높은 시장 점유율 유형

- 고기술↔높은 시장 점유율 유형에서는 국내 대기업 중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등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 및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고, 경기도 기업의 기술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과 시장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적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금융·세제 혜택과 같은 유치정책보다는 한국 기업과 기관들이 글로벌 R&D센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 최초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기술 핵심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치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일 경우 해외 R&D 센터는 자발적으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 대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방연관(backward linkage) 유형의 해외 R&D 센터와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 주변에 국내 및 글로벌 공급업체를 집결시키고,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함. 예를 들어 평택 반도체·LCD클러스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후방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삼성, LG 등 대기업의 수요를 보고 들어온 글로벌 소재 및 장비 업체로서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 기업은 국내 대기업 수요보다는 우리나라의 테스트마켓 기능에 기인하여 국내에 진출하고 있음. 수도권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소비성향, 높은 신기술 수용도, 적극적인 온라인 신제품 평가 등으로 차세대 제품에 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함.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등의 R&D센터는 세계 시장

에 팔리는 제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략적인 유치 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한국형 세계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체제(open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함.

#### □ 중기술↔높은 시장 점유율 유형

- 중기술↔높은 시장 점유율 유형은 글로벌 제품개발 핵심연구소를 유치함. 첨단기술 수준은 높지 않으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와 기계 등의 분야는 수요 기업의 기술 요구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발 중심의 소규모 R&D센터를 유치하도록 함. 예를 들어 GM대우와 같이 생산지원을 위한 소규모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점차 규모와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유도함.
- 이러한 부문에서는 개발 중심의 소규모 해외 R&D 센터 유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해외 R&D 센터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개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로벌 R&D 센터 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유지·확대 투자 유도를 위한 경기도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인센티브 제도는 신규진출 혹은 증설 시에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해당 여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에 부합 여부만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국내진출 기업의 신규 제품 개발 R&D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내 R&D 활동을 확대시킬 동기 부여가 미약함.
- 글로벌 제품개발 핵심연구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또한 경기도의 인력 우수성과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 입지라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 중기술↔낮은 시장 점유율 유형

- 중기술↔낮은 시장 점유율 유형에서는 비영리 R&D 센터 유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앵커(anchor) 기능 담당함. 국내 기술기반이 미약하고 시장 점유율도 낮

아 글로벌 기업의 진출유인이 부족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해서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음. 대상 기관으로는 국제연구기관(APEC기후협력센터, 나고야의 UNCRD), 외국법인 대학연구센터(미국 프렛허친슨 암연구소) 등의 분원 등임.

- 장기적인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추진하며 경기도는 국내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력은 높으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해외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2. 관광 · 물류형 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 1) 과제

- 글로벌 테마파크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형 테마파크 체인 시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디즈니의 경우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에 테마파크를 개장하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 일본에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차례 국내 진출이 시도한 바 있음.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관광 레저수요의 증대, 다양한 여가 패턴으로 기존의 테마파크와 차별화된 신개념의 테마파크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 여건이 성숙되었음.
- 테마파크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로 도시 및 지역개발의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국내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금융보험, 프랜차이즈, 캐릭터, 영상산업 등을 활성화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측면에서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세수증대가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복합 리조트 개발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의 제고가 가능함.
- 하지만 1999년 덴마크의 레고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후보지로 경기도 소재 지역을 밝혔다가 수도권 규제 정책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홍콩으로 옮겼던 사례

가 있음.

## 2) 추진 방향

- 경기도는 중앙정부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 면적 사업 규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6만㎡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100만㎡이상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정치적·행정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함.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연합된 지역개발기구 설립을 통해 글로벌 테마파크사업의 외자유치 정책을 직접 관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행·재정 전반의 분권화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경기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초장기 사업의 경제성 유지를 위해서 국공유 사업부지를 임대하고, 글로벌 테마파크의 접근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추진함. 정부의 글로벌 테마파크의 지분 참여를 통한 개발 사업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지분을 22% 차지하고 있음.
-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유지하여 글로벌 테마파크의 실현성을 제고시켜야 함. 외국인의 입지탐색, 사업 타당성조사, 마케팅활동 지원, 기술 인력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 관련 부대 서비스 등을 분석하여 국제적 시각에서의 관광사업 입지기준, 사업의 소프트웨어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의 장기화 및 다단계 구조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내포된 만큼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 3. 창조산업형 지구내 핵심시설/기업 유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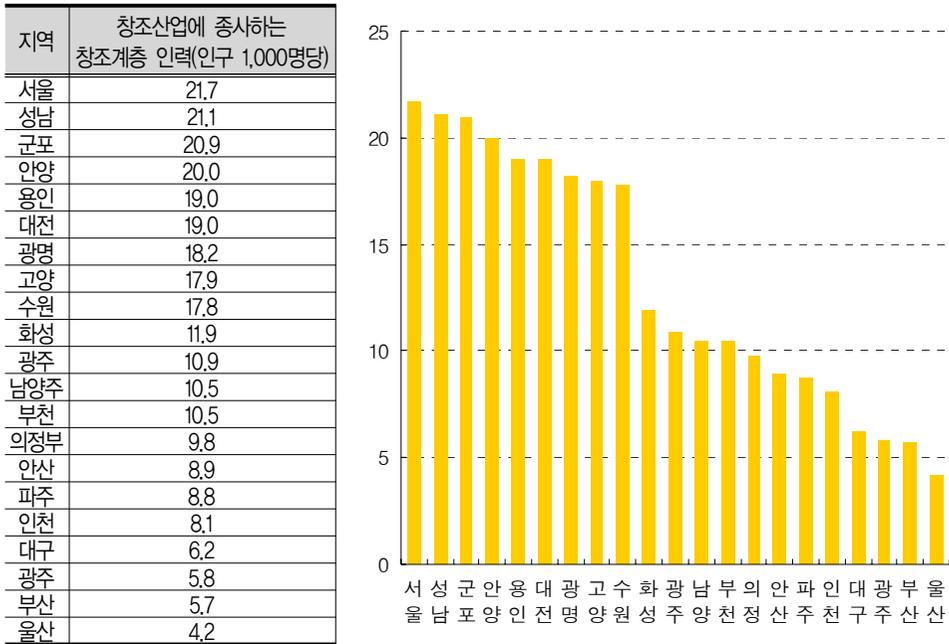
#### 1) 과제

- 전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새로운 시도로 창조도시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세방화(glocal) 추세 속에서 장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창조적 계층의 급성장, 도시의 경쟁력 확충 시급 등의 측면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 성장은 창조계급이 집적화되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창조계급의 집중은 창조산업의 성장 및 창조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고, 이러한 창조도시로는 워싱턴 DC,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을 들 수 있으며 창조계층의 대표적인 집적지로는 인도의 방갈로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창조직종의 전문화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성장율은 느리고, 반면에 오스틴, 밴쿠버, 토론토는 전문화 수준과 성장율이 모두 높은 지역임.
- 창조적 인재가 어느 정도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디자인, 하이테크 기업 창업과 같은 창조적 경제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는데 창조성은 독립적 부문이 아니라 경제 부문 전체에 걸쳐 투입되는 생산요소임. 창조계층은 컴퓨터, 공학, 건축, 자연과학, 교육, 미술, 디자인, 사업관리·재정운영, 법률 등을 포함하고 창조계층을 핵심 창조적 계층(super-creative core) (컴퓨터 수학 관련, 건축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교육, 미술, 디자인, 연예 등), 창조적 전문가(creative class) (관리, 사업 재정운영, 법률 관련, 전문직, 판매관리 등), 창조직종(배우, 아나운서, 건축가, 예술가, 무용수, 디자이너, 편집자, 음악가, 프로듀서, 감독, 사진작가 등)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창조산업은 광고,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출판, R&D, 미디어, 컴퓨터, IT 등의 산업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노동력, 아이디어 개발 시점의 중요성, 집적화 등이 필요함. 즉 창조산업의 부가가치는 아이디어가 상품 및 서비스로 변화하고 핵심(창작→제작)→지원(제작지원산업→배포)의 가치 사슬을 통해

서 창출됨. 한편 창조경제는 혁신적 사고의 생산과 전달을 위해 구축된 지식경제 사회구조(기업가 정신, 기술적 창조를 촉진하는 새로운 시스템, 유연적 생산방식, 창조성을 전달, 촉진시키는 사회, 문화, 지리적 환경)에 의해 활성화됨.

- 경기도의 창조계층 규모는 57.2만 명(전국 24.8%)로서 전국적으로 창조계층의 집중 지역으로는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성남, 수원, 고양, 대구, 용인, 안양, 부천 등을 들 수 있음. 창조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다양성, 도시 거리 경관, 주거환경, 공연과 만남의 개방적 분위기, 진입비용이 높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 밀집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도시의 진본성(authenticity) 등이 충족되어야 함.

〈표 25〉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창조계층 인력 분포



## 2) 추진 방향

- 외국인 직접투자가 창조계층 및 산업(컴퓨터, 공학분야 등)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이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외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국내 창조계층을 육성하고, 창조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함. 외자유치 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분야 중 제작 및 제작 부문에(예, 헤이리 예술마을), 중기·장기적으로는 창조산업의 가치사슬 분야 중 배포부문에 지원을 집중하여야 함. 예를 들어 IT 및 컴퓨터 프로그램 산업, Entertainment Industry, 한류문화 등을 육성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창조계층 육성 지역으로는 자유로 CT 벨리 문화산업 클러스터, 제2의 헤이리 마을(미국 산타 페이의 미술산업) 등이며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함. 여기서 하드웨어 인프라는 교통, 건강, 어메니티 등 지원 서비스 등이고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 연계 및 인적 교류를 위한 사회 시스템임.
- 해외 창조계층 유치시스템 운영 및 다양성·유연성의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 환경, 문화 등을 제공하여야 함. 시설은 고품격 주거지, 도시-농촌 어메니티, 휴식 및 문화시설(상점, 공연장, 갤러리 등)을 제공하고, 환경은 외국 자본 및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언어, 인종, 국적, 종교 등)해야 하며 문화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와 인사이더/아웃사이더의 지식 균형이 필요함. 최종적으로 창조산업 인큐베이터, 창조산업 제작 및 거래(네덜란드의 네트워크도시) 등 창조계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제5장 정책건의

---



## 제5장 정책건의

### 1. 새로운 경기도 주도의 산업입지정책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 필요성

#### □ 미래유망산업의 전략적인 유치

- 경기도는 서해안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도 3대 신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 지역들의 전략은 우선 서해안을 중심으로 관광레저휴양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 마리나단지 조성, 업무비즈니스지구조성 등 클러스터형 복합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담고 있음. 또한, 북동부지역도 관광레저단지, 고령친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구상을 가지고 있음. 즉 4만불시대에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서 의료/관광레저/고령친화산업의 복합화와 대형화를 이룬다는 계획임.
- 그러나 이들 단지 및 지구에 관련 기업들이나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핵심앵커시설이나 핵심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즉 국내외 메이저급 시설 및 기업들의 유치가 지구 및 단지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 예를 들면, 의료관광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앵커시설인 국제인증 받은 대형종합병원, 5성급/6성급 호텔, Beauty Complex시설 등의 유치축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대기업을 연구시설의 유치를 촉진하며, 또한 업무비즈니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형금융기관 등의 유치 촉진 정책이 필요함. 이와 같은 단지내에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핵심 앵커시설 및 핵심유망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이나 도시개발지원정책, 관광지조성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입지정책이 필요함.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기존의 입지정책으로는 미래유망산업 중 핵심앵커시설이나 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데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계획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앵커시설 및 앵커기업(핵심연구소)을 산업단지내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일정한 면적을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여 경기도/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내 노후공업지역 및 대기업이전적지의 최적 활용**

- 안양과 군포 등과 같이 노후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에서 신산업에 대한 입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및 개발업자는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 등 주거용으로 개발하려는 욕구가 크게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미래 전략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이 지역을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도입하여 IT융합연구소, 기업본사/지사, 사업서비스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대도시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및 대기업이전적지를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이 지역들을 어떻게 활용할 가를 사전에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서울시와 같이 준공업지역을 공장점유율 상황에 맞추어 산업존과 주거존을 적절히 할당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면서 산업도 유지시키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정책과의 연계/조정 강화**

- 경기도에는 시군차원에서 전략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과천정보타운, 수원광교 테크노밸리, 성남 메디밸리, 고양 브로맥스, 화성 송산테크노밸리 등 10개 정도의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있음. 그러나 이들 계획들은 경기도 종합적인 산업정책과 연계를 가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고 판단됨.
- 이들 계획들 중에서 사업성도 있으면서 경기도 산업육성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은 인센티브정책을 활용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핵심앵커시설 및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과천정보타운에 금융비즈니스지구를 지정하여 금융기

관, 비즈니스기업, 기업본사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또한 고양시에 특수 효과스튜디오를 유치한다던지, 화성시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내 국내외 대기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음.

#### □ 경기도 주도의 새로운 입지정책 수립 필요

- 기존의 중앙정부차원의 입지지원정책으로는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주도의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입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센티브정책도 수도권 의 경우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 따라서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들 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인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 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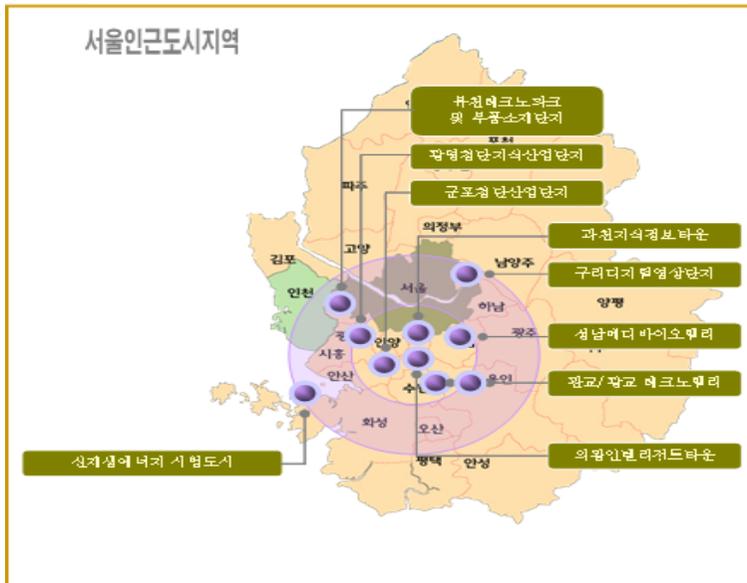
## 2.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 후보지 분석

-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첫째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구지정 대상지 신청을 받아 경기도 의 전략산업 육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경기도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신청 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음.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입지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이외에도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의료관광복합단지, 해양복 합산업단지, 군포 또는 안양 공업지역 재정비지구내에서도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이 가능함.

〈표 26〉 유형별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입지 가능 지역

구분	R&D형	관광·물류형	창조산업형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	○		
과천 지식정보타운	○		○
성남 메디바이오밸리	○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
화성 테크노밸리	○		○
시흥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MTV)	○	○	
시흥 군자, 토취장, 폐염전	○	○	○
광명 첨단지식산업단지	○		
부천 테크노파크 및 부품소재 단지	○		
의왕 인텔리전트 타운	○		○
군포 첨단산업단지	○		
구리 디지털 영상산업 및 첨단단지	○		○
양주국제화지구내			○
평택국제화지구내			○
평택배후단지내	○	○	
동탄비즈니스지구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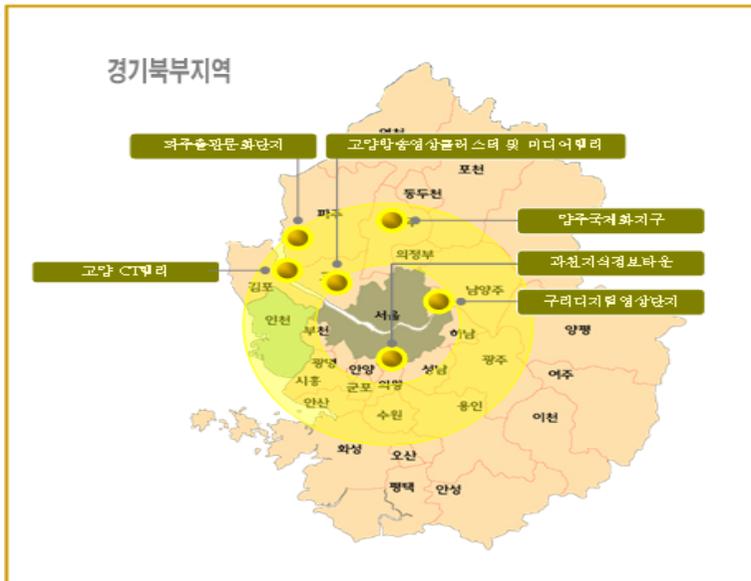
### R&D중심형 지구 후보지역



### 관광물류중심형 지구 후보지역



### 창조산업형 지구 후보지역



### 3. 전략산업육성지구 선정방법

#### □ 선정기준

- 업종기준 : 경기도 미래신산업과 전략산업 중 핵심시설 및 앵커시설을 대상으로 함. 각 지구 내의 권장업종은 2개 이상의 복수지정이 가능함. 단, 이 경우는 중점 육성업종인 주업종과 연관업종인 부업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도 있음.
- 지역기준 :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해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지역, 관광레저육성을 위한 신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지원시설/기반시설 등 지역여건, 성장잠재력과 산업집적효과 정도, 지역내 개발계획과의 연계가능성, 경기도 산업육성계획과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 세부요건 :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대상지역내 공장부지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도지사가 특히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육성 하고자 하는 지역. 또한 해당산업의 발전가능성(산업집적효과, 성장잠재력, 지역발전 기여가능성), 대상지역의 적합성(교통접근성, 산업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정도, 업종의 분포 및 특성), 추진주체의 육성의지(신청기관인 시군 등)의 육성계획), 경기도 산업정책과의 연결성,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판별
- 면적기준 : 기업업무환경이 양호한 지역내에 최소지구면적은 클러스터기능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함.

#### □ 선정절차

- 전략산업육성지구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에서는 지정 후보지의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 판별요건에 따라 대상지 선정 심의를 하게 됨. 대상지 선정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지구지정 대상지를 선정함.

- 하향식 : 경기도에서 제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지구대상지 결정
  - 예 :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 상향식 : 시군에서 신청을 하여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지구대상지 결정

#### □ 사업지구의 지원, 관리 등

- 지구내 지원사항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지구내 지원은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해당지역 및 권장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수립하는 진흥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함.
-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레저단지, 준주거지역 등 기타 용도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함. 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업종별 클러스터를 추진할 경우에는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구지정 후 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관리하기 위해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진흥계획에는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세부지원방안, 지구의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등 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4. 상위법과 전략산업육성지구와의 관계

- 전략산업육성지구는 국토이용및계획법 37조, 동법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로 근거하고 있음. 경기도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으나 주로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었을 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것은 아님. 또한 기존에 지정되었던 개발진흥지구에는 인센티브정책도 거의 없는 편임.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따라서 전략산업육성지구와 개발진흥지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곳을 국토이용및계획법 37조, 동법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경기도에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도록 함.

## 5.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 □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 방향

- 현재 경기도에는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지원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경기도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상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법에 근거하여 가칭)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1안 : 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안 : 경기도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 경기도 지원조례에서 담아야 할 내용

- 조례를 제/개정시 담아야 할 내용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정의,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절차(상향식과 하향식),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기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정의와 수립방법 및 절차, 전략산업육성지구에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정책 등임.

## 6.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 전략산업육성지구내 부지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매입, 핵심시설 공동유치활동
-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지원 등
-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등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우선융자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등



##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 경기도, 2005.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도, 2007. 「산업발전비전수립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도, 2008.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문미성, 2005.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발전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 박영철, 2003.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박희석, 2005.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산업연구원, 2005.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
- 성영조, 2006.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경기개발연구원
- 윤갑식, 2007. 「인천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산업연관분석」, 인천발전연구원
- 이경숙, 2007.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기기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산업연구원
- 장철순, 2003.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장철순, 2005.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정만태, 2007. 「로봇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산업연구원
- 정병순, 2006. 「서울시 도심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지원, 2007a. 「인천광역시 SW산업 육성방안 ; 송도 u-Service 수요를 배경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_\_\_\_\_, 2007b. 「인천시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조달호, 2007. 「서울시 R&D 육성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정래, 2003. 「산업정책 및 도시정책이 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통계청, 2007. “지역생산계정,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경기일보, 2008. 5. 22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연합뉴스, 2008. 9. 22. “인천시 지역산업 육성사업지구 지정한다”

한국경제, 2008. 6. 30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건립 60-80%까지 허용”

---

---

정책연구 2008-14

##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전략

---

2008년 9월 인쇄

2008년 9월 발행

---

발행인 좌승희

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전화 : 031)250-3114 팩스 : 031)250-3111

홈페이지 : [www.gri.kr](http://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개발연구원, 2008

---

---